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외교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6. 4.

대한민국정부

목 차

I. 외교부 본부	1
II. 외교부 재외공관	25
1. 주필리핀대사관	26
2. 주일본대사관	27
3. 주중국대사관	30
4. 주상하이총영사관	34
5. 주캄보디아대사관	35
6. 주베트남대사관	41
7. 주태국대사관	42
8. 주미국대사관	43
9. 주유엔대표부	49
10. 주뉴욕총영사관	49
11. 주토론토총영사관	51
12. 주페루대사관	52
13. 주브라질대사관	53
14. 주아르헨티나대사관	55
15. 주칠레대사관	56
16.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56
17.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63
18. 주밴쿠버총영사관	66
19. 주시애틀총영사관	70
20. 주네덜란드대사관겸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73

21. 주독일대사관	76
22.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77
23.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80
24. 주룩셈부르크대사관	81
25. 주덴마크대사관	84
26.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	95
27.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97
28. 주모로코대사관	103
29. 주튀니지대사관	103
30. 주튀르키예대사관	104
31. 주이스탄불총영사관	105
32. 주레바논대사관	105

Ⅲ. 산하 기관 106

1. 한국국제교류재단	107
-------------------	-----

I . 외교부 본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감사관실	1. 강제동원 공탁 과정에서 가짜 인감 사용 관련, 외교부 내부 관여 의혹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	○ 외교부는 행안부의 조사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25.12-'26.1) 후, 그 결과를 행안부로 이첩하였으며, 행안부에서는 '26.4월 현재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중 ○ 수사 결과 외교부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
의전장실	1. 총리실, 대통령비서실의 의전실 인원 구성 문제 관련, 김건희 여사의 의전을 위해 활용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외교부 의전장실에서는 영부인의 공식일정에 대한 의전 사항을 지원중임.
	2. 대통령 해외순방 시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 설치 관련 진상을 규명할 것	○ 대통령 해외순방 시 배우자프로그램 및 영부인 별도 공식 일정을 위해 주최측이 마련한 접견실 사용 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도 함. ○ 외교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상외교 의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임.
인사기획관실	1. 공관장 공석 장기화, 재외국민 보호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인력 확충 및 조직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최적의 인사를 선별·임명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현재 30여 명의 공관장을 임명하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등 공석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캄보디아 공관장 3개월 이상 공석 상태로 정식 대사를 신속히 임명할 것	○ ‘25.11.28. 김창룡 전 경찰청장을 신임 주캄보디아 대사로 임명함.
	3. 특임공관장 인선의 투명성과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를 기존 서면방식에서 대면심사로 전환하여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앞으로도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음.
	4. 외교부 전체 성비는 5대5 수준이나 대사급은 173명 중 여성 8명(4.6%)에 불과한바, 여성 대사 확대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 외교 수단으로 적극 검토할 것	○ 우리 부는 역량있는 여성 관리자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구조상 여성 대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년 3월말 현원 기준, △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1.7% △ 여성 공관장 비율 7.4% － 현재 전체 과장급 여성직원 비율은 41.1%(본부 과장급은 53.4%)로 외교부 여성관리자의 대표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가까운 시일 내 신규 여성 고위공무원단 진입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앞으로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등을 고려하여 여성 고위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관리자를 적극 발굴·육성할 계획임. ※ '18년 여성관리자(고위공무원·본부 과장급) 임용 목표제 도입 이래 외교부는 매년 목표치 초과 달성중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1. 젊고 유능한 외교 인재 육성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 진단 및 처우 개선·조직 혁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외교·안보 특화 AI 도입 등을 통한 업무혁신, '비생산적 일 제거'를 비롯한 조직문화 진단·개선, 특별포상제도 신설·운영 등 조직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임.
기획재정 담당관실	1. 고물가 지역 파견 외교관들에 대한 활동비 현실화 미흡으로 실질적 활동 제약 발생, 외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활동비 현실화 및 예산 반영 필요	○ 2027회계연도 외교활동사업비 증액을 추진 중으로, 전세계 물가상승률, 고환율 등 감안 향후 외교활동사업비 현실화 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
재외공관 담당관실	1. 젊고 유능한 외교 인재 육성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 진단 및 처우개선·조직혁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재외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미성년 자녀 동반시 직원주택 임차료 추가 지원 △미성년 자녀 동반 가족 생필품 파우치 기준 무게 증량 △순회 의료진 파견 사업의 확대 실시 △인혁처 및 예산처와 협의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해 일부 공관의 특수지 등급을 조정하였음. ○ 재외공무원 처우를 위해 앞으로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지속하여 개선안을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외교정보보안 담당관실	1. 재외공관 도청탐지 장비 보유 현황, 점검 주기 및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	○ 도청 위협도에 따라 단계별 대도청 보안시스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전 공관에 최소 2대 이상의 대도청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에서 전재외공관의 대도청 탐지시스템 관제 수행 중 ○ 관계기관 합동 및 자체 보안점검 출장 계기 대도청 탐지 활동 수행(「국가기관의 도청 탐지·방어 활동 가이드라인」 준수) * 26년 37개 공관 수행 예정 ○ 26년 이동형 도청탐지 장비를 시범 도입하여 도청 사각지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재외공관 환경에 적합한 대도청 보안 활동 지속 수행 예정
동북중앙아국	1.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측 입장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설치 여부에 대한 외교적 대응에 노력할 것	○ 정부는 ‘추가설치 반대, 구조물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 필요’ 입장을 바탕으로 중측과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25.11월, 26.1월) 시 서해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는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음. ○ 26.1월 말, 중국 정부는 구조물 일부(관리플랫폼)를 잠정조치수역 외측으로 이동하였음. ○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입장을 바탕으로 중측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계속 진전을 모색할 예정임.
	2. 서해 구조물 관련, 행정당국 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국민 정서와 국제법·한중어업협정을 근거로 정식 대응할 것	○ 정부는 ‘추가설치 반대, 구조물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 필요’ 입장을 바탕으로 중측과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25.11월, 26.1월) 시 서해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는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음. ○ 26.1월 말, 중국 정부는 구조물 일부(관리플랫폼)를 잠정조치수역 외측으로 이동하였음. ○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을 바탕으로 중측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계속 진전을 모색할 예정임.
북미국	1.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그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추진 관련 상황 및 결과는 대통령실 사전 및 사후 브리핑을 통해 대외발표
	2. 주한미국대사관의 장기간 무상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 임차료 면제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국유재산법상 외국정부의 사용료 감면 규정 관련 국유재산법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우리부 의견 제출(2025.12월)
	3. 마스가 프로젝트 등	○ 한·미 정상회담 공동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미 조선 협력 논의 관련, 국내 기업의 미국 군함 제조 참여 및 향후 우리나라의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 확대를 위한 법적 제약 해소 등 전략적 외교 노력을 강화할 것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2025.11.14. 발표)에서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 창설 및 미국 군함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 등 확인 ○ 향후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바탕으로 한미 조선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
중남미국	1. 한·중남미재단 설립을 검토할 것	○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음.
유럽국	1. 대러 제재 동참으로 인한 우리 기업·교민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해 완화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우리 주러대사관은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대러제재 관련 법률자문사업을 실시하여 피해 완화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음. ○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바, 러시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영사안전국	1. 재외국민 사건·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재외국민 보호 조직의 기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중장기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안전기획관(고공 나) 신설, ▲해외위난대응과 신설, ▲영사콜센터 직제화 및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 ▲사건사고 담당 공관 인력 증원 등 조직·인력을 확대하였음. ○ 또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 증가, 전세계 동시다발적 및 새로운 유형·규모의 위난 등 재외국민보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환경 변화를 감안, 중장기 차원의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하였음. - 동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1년 단위의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임.
	2. 캄보디아 사태 등에 현행 규정상 긴급지원비의 적극적 활용이 불가능한바, 규정을 개정하고 기금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	○ 외교부는 일선 영사들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사후 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관장 판단 하 긴급지원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본부는 대사관에 동 금액을 바로 송금하고, 이후 무자력 여부를 검토하여 무자력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긴급지원비 상환을 거부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 중(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既상정) ○ 한편, 긴급지원비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긴급지원비 사업의 규모(연간 2억원 상당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로 운용되는 여타 정부 기금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 ▲기금 설립·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우선적으로 현행 사업의 틀 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최대한 개선한 후 기금 전환 필요성을 재검토할 예정
	3. 재외국민 보호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인력 확충 및 조직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 '23.6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축소되었던 영사안전국 조직·인력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이 '25.12월에 이루어져 ▲해외안전기획관(고공 나) 신설, ▲해외위난대응과 신설, ▲영사콜센터 직제화 및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개편 - 영사안전국 인력은 21명이 증원되어 총 100명이 됨. ○ 캄보디아 포함 동남아 지역 영사 인력을 총 16명, 동남아 지역 경찰 주재관을 총 6명을 증원하여 사건사고 담당 공관인력 확대 - 전 세계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19명, 영사협력원 19명 증원
	4. 해외 입양 동포 중 시민권 미취득자의 구금·추방 문제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 부는 주무부처인 재외동포청과의 협력 하에 각 재외공관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 미국 내 한인 입양인 중 시민권을 미취득한 자 중 현재까지 보고된 구금·추방 사례는 없음.
	5. 김해국제공항에 긴급여권 발급 창구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이	○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개소식을 3.27(금) 개최하고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365일 긴급여권 발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많으므로 향후 설치 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	서비스를 개시함('26.3.28.).
	6.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민원서식 부재 및 여권안내 홈페이지 접근성 미흡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 계획 마련할 것	○ 여권발급신청서의 내용과 작성법을 QR코드를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시행('25.11.3.) 중임. ○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조치를 시행함. - 홈페이지 상단 글자크기 확대/축소 버튼의 크기 확대('25.10.14.)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이용안내 페이지 추가('25.10.21.) - 여권발급신청서 내용 및 작성법 관련 QR코드 활용 음성안내 서비스 시행('25. 11월) -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주관 웹접근성 품질인증 추진('26. 1분기)
	7.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초기 대응 및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캄보디아 당국과의 소통·협력 강화)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를 임명·파견(2025.10.16.-11.30.)하고, ‘코리아 전담반’*을 출범(2025.11월)시켰음. * 코리아전담반은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24시간 합동 근무하며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 대응 ○ (우리 국민 보호 및 범죄인 송환) ▲ 대사관 인근 임시숙소
	8.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취한 구체적인 조치 내역을 보고할 것	마련(2025.10월~) 및 대사관 내 24시간 상황실 구축(2025.10월~12월) 등을 통해 해당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공 지속 ▲온라인스캠 연루 혐의 우리 국민 64명을 송환(2025.10.18.)하고 이후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 포함 역대 최대 규모인 73명을 송환(2026.1.23.)하였음. ○ (인력 확대 및 조직 개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을 통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고공 나)’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콜센터’를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보호·지원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정식 배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음. - 아울러, ▲주캄보디아(대)에 본부 및 여타 공관 지원인력 16명 한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파견(2025.10월-12월), ▲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영사인력 16명 및 경찰주재관 6명 증원('25.11.25. 직제 확정), ▲ 주캄보디아(대)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증원, ▲ 주캄보디아(대) 경찰인력 2명 추가 파견('25.11.5), ▲ 영사협력원 2명(시하누크빌 및 캄푹 지역) 증원(11.21) 등 인력을 총원하였음. ○ (대국민 홍보) ▲ 5차례의 언론 브리핑, ▲ 12건의 보도자료, 54회의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방송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 ○ (매뉴얼 마련) 외교부는 동남아 및 중국 지역 재외공관에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지시(2025.11월)하여,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 상황 및 공관 사정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였음. - 외교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경우 공관 조치 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외공관에 하달(2025.12월)하였음. - 아울러, 외교부는 각 재외공관에 긴급신변보호를 요하는 우리 국민이 공관을 방문할 경우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지시(2026.1월)하여,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 상황 및 공관 사정을 고려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음. ○ (국제 네트워크 강화)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미·중 등 주요 파트너 국가 및 ASEAN·APEC·UN 등 지역·다자 차원에서도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음. - ▲ 우리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통한 우리 경찰청-아세아나폴 협력 사업(Breaking Chains) 지원, ▲ UNODC 스캠 범죄 대응 사업 지원 등도 추진 중
	9. 캄보디아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경찰주재관·영사 인력 증원 등 실효성 있는 현지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 2025.11월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전담반이 출범하였음. - 코리아전담반은 2026.2월까지 스캠범죄 연루 우리 국민 150여명을 검거하였음. -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중심으로 코리아전담반과 협조하면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적극 대응한 결과, 작년 10월 77명이던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접수가 올해 1월 8명, 2월 1명으로 감소하였음. ○ ▲ 주캄보디아(대)에 본부 및 여타 공관 지원인력 16명 한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파견(2025.10월-12월), ▲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영사인력 16명 및 경찰주재관 6명 증원('25.11.25. 직제 확정), ▲ 주캄보디아(대)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증원, ▲ 주캄보디아(대) 경찰인력 2명 추가 파견('25.11.5), ▲ 영사협력원 2명(시하누크빌 및 캄푹 지역) 증원(11.21) 등 인력을 총원하였음.
	10.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경찰,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선도적으로 협조 요청할 것	○ 캄보디아 등지의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25.12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하였으며, 외교부는 동 TF에 적극 참여 중임.
	11. 재외공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2025. 3월, 5월 및 12월에 전재외공관 대상으로 재외공관 등 사칭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함. - 재외공관에서는 범죄 수법 및 예방 수칙을 ▲공관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시하고, ▲리플릿, 포스터 또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동포사회 배포하는 등 동 범죄에 대응하고 있음. - 아울러, 외교부는 2025.10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피싱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에 우리 국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주재국 사법당국에 범죄수익금 압수·동결 및 피해금 환부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적극 요청하라고 지시함.
	12. 캄보디아 내 범죄 관련 국민 다수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 소재 규명 및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할 것	○ 동 사안 관련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제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음.
	13. 캄보디아 내 범죄 문제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제도적·현장 중심 대응과 함께 ‘코리아 데스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2025.11월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전담반이 출범하였음. - 코리아전담반은 2026.2월까지 스캠범죄 연루 우리 국민 150여명을 검거하였음. -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중심으로 코리아전담반과 협조하면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적극 대응한 결과, 작년 10월 한달간 77명이던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접수가 올해 1월 8명, 2월 1명으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감소하였음.
	14. 캄보디아 단속 강화에 따른 태국·라오스·미얀마 등 인접국으로의 범죄 확산 우려에 중국 공안, 메콩 5개국 등 APEC 역내 차원의 안전 협의체 구성 및 다자 공조체계를 추진할 것	○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미·중 등 주요 파트너 국가 및 ASEAN·APEC·UN 등 지역·다자 차원에서도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통한 우리 경찰청-아세아나폴 협력 사업(Breaking Chains) 지원, ▲UNODC 스캠 범죄 대응 사업 지원 등도 추진 중
	15.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수배 중인 자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경우 공관 조치 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외공관에 하달(2025.12월)하였음.
	16. 정상적 취업 절차 없이 동남아 개도국 진출 시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안내할 것	○ ▲5차례의 언론 브리핑, ▲12건의 보도자료, 54회의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방송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
	17. 캄보디아 내 범죄사례는 국제사회에서 정의하는 전형적 인신매매와 일치하는바, 캄보디아	○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미·중 등 주요 파트너 국가 및 ASEAN·APEC·UN 등 지역·다자 차원에서도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 한-아세안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문제 해결 시 국제 인신매매 프로토콜에 따른 다국적 조직범죄 대응 전략을 적용할 것	협력기금(AKCF)을 통한 우리 경찰청-아세아나폴 협력 사업(Breaking Chains) 지원, ▲ UNODC 스캠 범죄 대응 사업 지원 등도 추진 중
	18. 캄보디아 내 한국 사람들 중 불체자들이 과태료·항공권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현지 당국과 협력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	○ 해당 우리 국민의 경제적 상황, 질병 등 인도적 고려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관에서 현지 당국과 소통하며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관련 규정상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긴급지원비 제도를 통한 항공권 등 지원도 시행 중
개발협력국	1. 캄보디아 ODA 사업이 급증한 배경과 추진 경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	○ 외교부가 소관 무상 ODA가 아닌, 재경부 소관 유상 ODA 사업 관련 내용으로, 재경부 측 자료 협조를 통하여 보고를 완료함(한정애 의원실, '25.10월). ○ (무상 ODA) '22년 이래 對캄보디아 무상 ODA 예산은 500억 원 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 ('22년) 약 535.2억 원 → ('23년) 약 506.3억 원 → ('24년) 약 522억 원 → ('25년) 약 531.5억 원 → ('26년) 약 507.4억 원 ○ (유상 ODA) 재경부 측은 아래와 같이 설명함. - “발굴에서 집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EDCF 사업 특성상, '25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캄보디아 EDCF 예산 증가는 지난 정부 이전부터 추진되는 사업들의 집행이 본격화된 데에 일부 기인한 측면이 있음.”
	2. ODA 사업 중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KOICA는 ODA 사업 추진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외교부는 '25.9월 「KOICA 제도개선 및 역할 재정립 TF」를 출범, '25.12월 「KOICA 책무성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함. ○ 상기 KOICA 책무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KOICA의 ODA 사업 계약 구조 및 심사체계 개선을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 중임.
	3. KOICA 직제 규정 위반 사례 및 보좌관실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KOICA는 '25.12.30. 관련 직제규정을 개정함. - 보좌관은 당초 직제규정상 조직이자 보직·직급으로 규정되어있었으나, 조직상 보좌관은 (이사장) 비서실로 개편, 보직·직급상 보좌관은 폐지 - 보좌관실의 조직도 미표기 지적을 고려, 개편된 비서실은 조직도에 반영 완료 ○ 외교부는 앞으로도 KOICA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임.
	4. 양자 ODA 시 국가 브랜드 실증, 분절화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30)」은 우리 ODA 인지도 제고를 위해 ODA 사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문제 극복을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국가 표식과 문구를 더욱 부각시킬 것	홍보시 태극기 사용 원칙화 명시 ○ 향후 상기 기본계획에 따라 ODA 사업 홍보시 태극기 등 국가표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ODA 브랜드 인지도 제고 노력
	5. 특검 수사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절차가 거의 중단됐는데, 특검 관련한 ODA가 아닌 경우 중단 해제를 검토할 것	○ 특검과 무관한 무상 ODA 사업의 경우 중단된 바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6. 디지털 헬스, 감염병 대응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보건 분야에서 실질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 ODA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	○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2026-30)」은 전략적·효과적 무상원조 이행을 위해 우리 강점 역량을 반영한 단일 전략목표 체계를 수립함. ○ 보건 분야 또한 우리 무상원조 핵심분야로서,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2026-30)」 전략목표에 보건 분야를 명시하여 우리 무상원조 전략상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함. ※ 전략목표 ②, “건강한 청년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회복력 강화” - (중간목표②-1) 감염병 대응 - (중간목표②-2) 모자보건 등 기초보건 개선 - (중간목표②-3) 보건인력 양성 - (중간목표②-4) 보건의료체계 개선
국제법률국	1.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데이터를 보강하고	○ 외교부는 생성형 AI가 영토주권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확산하는 데 집중한 AI 대응형 데이터 외교정책을 마련할 것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을 지속해오고 있음. ○ 아울러, AI 프로그램에서 우리측 입장을 인용하기 용이하도록 독도·동해 홈페이지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AI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음.
	2.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JDZ) 협정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쟁점과 종료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JDZ 협정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익 확보를 위한 여러 대응방안을 강구해오고 있음. -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전문가 그룹 등과 지속 소통하며 여러 방안들의 국제법적 측면과 현실적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
공공문화 외교국	1.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교육비 전용 등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 재단 이사장의 국내외 출장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보고할 것	(교육비 전용 등 운영실태 점검 및 대책마련) ○ KF 자체 특정감사('25.7월) 실시,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조치, 부당 집행액 전액 환수 조치하였으며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 대폭 개선* 실시 ※ (前) 개인 자율 선택 강의 수강 후 개인 증빙(수강증 등) 제출 → (後) 재단 계약 위탁업체를 통한 강의 수강, 업체 월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결과 보고 등 확인 ○ 외교부 감사관실은 현장점검('25.9월)을 실시, '20-'24년 외국어교육비 집행 관련 KF 조치 등을 점검하였으며, '26년 하반기 외교부 정기감사시 KF에 대한 감사 실시 예정 (이사장 출장 필요성 및 성과) ○ 외교부, KF 이사장 출장 필요성 및 성과 등 관련 한정에 의원실 설명('25.10.27) ○ 외교부-KF간 수시 협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출장은 줄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 예정
양자경제 외교국	1. 한미 관세협상 및 대미 투자 논의와 관련하여, 협상 경과와 정부 입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에 기반하여 명확히 설명할 것	○ 정부는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및 한미 전략투자 MOU 내용을 모두 공개하였고,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 설명하였음. ○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의 투자 관련 논의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칠 예정임.
	2. 미국 이민당국(ICE·CBP)의 자의적 해석으로 발생한 문제 사례와 관련하여, 해석상 애매한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해 한미 간 명확히 합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 정부는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 ○ 그간 워킹그룹을 통해 B-1 비자 허용 활동범위 명확화 및 국영문 팩트시트 게재 등에 합의한바, 회색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취할 것	협의하겠음.
	3. 주한미국대사관 내 미국 투자데스크 설치와 관련하여, 미측의 데스크가 실제 현장 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 외교부 2차관이 KIT Desk를 직접 방문('25.12.5.)하여 전담 창구의 주요 역할과 활동 계획 등을 점검하였음. ○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측 피드백을 수시 파악 중임.
	4. B-1 비자로 포섭되지 않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 비자 신설 필요성과 관련하여,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	○ 정부는 우리 국적 전문직 인력 최대 15,000명 대상 비자(E-4) 신설을 위해, 美 의회·행정부·학계 등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지속하고 있음. ○ 향후에도 미국 비자제도 근원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등을 통해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5. 한미 관세협상이 국가 경제·외환시장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APEC 시한에 쫓긴 졸속 타결을 경계하고, 상호 이익·상업적 합리성·시장 충격 최소화라는 협상 원칙을 끝까지 견지할	○ 정부는 상호 이익 수호·상업적 합리성 보장·시장 안전장치 마련 등의 원칙 아래 한미 관세합의를 타결하여, 경제통상 관계 안정화 및 경제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하였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것	
	6.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별 관세 시도 관련, 정확하게 파악 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것	○ 관계부처 간 협력 하에 품목 관세 관련 미측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중임.
	7. 경제안보 등 융복합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외공관 기능 강화	○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25.11월 조기경보시스템(EWS) 공관(총38개)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경제안보 점검회의」 체계를 신설하였음. ○ 각 공관에서는 동 회의 계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공관 중심의 경제안보 민관 협력을 지속 추진 중임.
	8. 경제외교 역량강화를 위해 외교부 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5년 하반기 수시직제 개편 당시 경제안보외교국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불수용된바 있음. ○ 증대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감안시, 관계당국과의 협의 下 국 신설 등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기후환경과학 외교국	1. 신안보·경제안보·기술협력 등 융복합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외공관 기능 강화 및 AI 전담 조직 상설화 추진과	○ (기술협력) 「AI 액션플랜」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국 AI 거점공관 지정 및 AI 전문관 운영 예정 - 주요국 소재 경제·산업·과학기술분야 정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할 것 2. APEC 경주선언 채택 이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외교부 내 AI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상설화할 것	산하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정례화 및 종합체계 구축 추진 ○ '26년도 외교부 AI 전담조직 직제화 추진하였으나 미달성 - '27년도 AI외교TF를 직제화하기 위한 소요정원 제출 등 국내부처 협의 진행 중
외교정보 기획국	1.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본부 채용 합격을 취소할 것	○ 해당 채용건은 공수처 수사 및 자체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로 채용절차를 중단해 왔음 ○ 다만, 외교부는 수사·감사와는 별개로 공정채용 규정 마련('25.11월) 등 내부 개선조치를 추진하였음. 동 규정에 의거,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을 준비 중에 있음.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임
한반도정책국	1. 한반도 평화외교 관련, 한반도정책국으로 축소된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외교부는 25년 하반기 수시직제 요구서 제출 및 27년 정기직제 요구서 제출 등 현행 조직의 인원을 확충하고 직제 신설 등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중임. - 금년 중 직제 개편 및 증원을 위해 상반기 수시직제 요구서 제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제안보국	1.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 등 제재로 인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 우리 산림청의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을 위해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미, 대러 협의 등 외교적 지원을 지속 중임.

Ⅱ. 외교부 재외공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필리핀 대사관	1. 필리핀 방산 수출 추진 시, 장기 무이자 차관 등 불리한 계약 조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필리핀 방산 수출 주진과 관련하여 장기 무이자 차관제공 등 불리한 계약조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이를 위해 월 1회 대사관 주관 방산전략 TF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수출사업의 계약조건, 재정지원 방식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불리한 조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특히 협상 가이드라인은 방사청 등 주관기관에서 마련하는 기준을 준수하되 대사관에서는 현지 여건, 자원 조달 환경 및 상대국 협상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리스크를 식별·전파하는 역할을 적극수행할 예정
	2.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간병·돌봄 등 대체 가능한 인력 협력 모델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단 후 주재국 담당부서인 이주노동자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영향을 파악·관리하고 있음. - 지난 3.24. 한-필 노동분야 협력 우호주간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협력방향 논의 ○ 필 이주노동자부 및 우리 관계부처(고용노동부)와 지속 소통·협력하면서 협력 모델 협의·모색해 나갈 예정
	3. 코피노 문제와	○ 우선, NGO, 학계 등을 통해 코피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친부모 찾기 등 인권 보호를 위한 대사관의 적극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추진 ○ 코피노 실태 파악을 통해 코피노들에게 실제 필요한 부분(긴급 의료지원, 구호 등) 및 인권보호·생활개선 방안 마련 ○ 현재 공관이 시행 중인 하기 방안을 지속 시행하고 코피노에 대한 법적 지원, 정책 논의 강화 - 코피노 아동에 대한 친자 등록 요구 시, 법원을 통한 인지청구 절차안내 및 지원 - 코피노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을 위해 금년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
주일본 대사관	1. 사도광산, 조세이탄광, 우키시마호 등 과거사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항의 위주의 대응을 넘어 일본 내 시민단체·연구자 등과의 교류를 포함한 공공외교를 병행할 것	○ 대사관은 과거사 관련 현안 문제에 있어 日 시민단체·정치권·연구자들과의 소통·교류를 통해 해당 사안의 인도주의적 해결을 위한 일본내 관심 제고 및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해오고 있음. ○ 향후에도 우리 대사관은 과거사 현안 문제에 있어 日 시민단체·정치권·연구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공공외교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자 함.
	2.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 확인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 1,140명의 미지급 임금	○ 대사관 차원에서 사도광산 관련 명부 확보를 위해 외무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본부에서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문제와 관련하여 명부 확보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	주한일본대사관을 상대로 관련 협조를 구하는 중임.
	3. 조세이탄광 및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하여, 한일 협력 하에 인도주의적 유해 발굴 및 봉환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본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	○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일본 내 식민지 시절 아국인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중시하면서, 일측 협조 확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음. - 2026.1월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한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성과가 있음. -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 일측으로부터 총 3차례 75건의 명부 및 기타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후 우리 국내적 분석 이후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 ○ 향후에도 대사관은 유해발굴 및 봉환 사업의 진전을 위해, 본부 및 관계부처와 소통하면서, 日 현지 관계 기관의 협력 확보 노력도 기울여 나갈 예정임.
	4. 나가사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추모비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일본 측에	○ 대사관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추모비 관리 실태를 현지 총영사관과 함께 확인하여 환경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요청하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 관련 실태 파악 및 조사 필요성을 본부에 건의할 것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 검토해 나가고자 함. ○ 대사관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관련 실태에 대해서도 본부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고자 함.
	5. 한일 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연장 및 상시화 가능성을 일본 측과 지속 협의할 것	○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양 국민의 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2025.6월 한 달간 양국 국민 대상 입국 전용 심사대를 운영하였음. - 이용객들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한일관계 개선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연장 또는 상시화 관련 사항은 양국 모두 출입국 관련 자체 규정이 있는 만큼 일측과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바, 대사관으로서는 일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6. 일본 내 도서 지역 조난자 발생 시 민간 구조헬기 임차 등 보완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도쿄도 외 관할인 치바, 사이타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역 동포 간담회 개최하여 구체적인 수요와 사례검토를 위한 의견 수집하겠음. ○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주재국 정부 구조헬기 운용 상황과 민간 구조헬기 등록 상황 파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예정임.
	7. SNS상 혐한 콘텐츠 및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 혐한 움직임이 오프라인 시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일본 당국과의 정보 공유 및 예방적 대응을 강화할 것	○ 일본 당국과의 협조로 온·오프라인 혐한 세력 및 활동 동향 상시 모니터링 중 - 경시청 공안부 공관연락담당반, 우리 대사관 관할 정보부서는 도쿄 내 우익단체 활동 중 우리나라 관련 건 실시간 유선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상 특이 동향은 양측 모니터링 내용 공유 중임.
	8. 워킹홀리데이 전담 상담원 운영 실태 및 상담 내용을 점검하고 소통·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보완할 것	○ 워킹홀리데이 상담원 운영실태 및 상담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연2회(상·하반기) 상담 실적 및 주요 상담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고 있음. ○ 대사관 홈페이지에 워킹홀리데이 상담원 메일 주소 등을 게시,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또는 참여 희망자와 소통을 강화하겠음.
주중국 대사관	1. 고위급 교류 및 실무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에 대한 결례나 불합리한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분명히 전달할 것	○ '25.11월 및 '26.1월 양국 정상 상호 국민방문을 통해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한바, 동 모멘텀이 구체적·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음. - 양국 모두 고위급 교류 및 실무 소통 과정에서 상호 존중 인식 하 협력해나가고 있는바,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나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중국 주재 공관과 본부 간 공문 수발신 감소와 관련하여, 외교 활동의 실질적 성과 보고의 충실성을 종합 점검하고 한중관계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보고 기능을 강화할 것	○ 주재국 정부는 물론 당지 외교단, 기업, 전문가 등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현지 동향 및 현안 분석·보고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3. 중국 내 K-POP 공연 및 문화교류 제한과 관련하여, 대규모 문화공연 재개를 위한 중측과의 협의 지속 추진 및 대중문화 외에도 전통·클래식 등 다양한 문화교류 채널을 적극 발굴할 것	○ 우리 대사관은 한중 우호정서 증진과 문화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공외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측과 여러 소통 계기에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 채널 발굴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4. 보이스포싱 등 초국경범죄가 집중된 지역에 경찰협력관 추가 파견 필요성 검토할 것	○ 중국 내 보이스포싱 등 초국경범죄는 산둥성, 동북3성, 상해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며, 상기 지역 및 북경에는 각 지역별로 2명의 경찰영사가 파견되어 대응하고 있음. ※ 기타 지역은 각 1명씩 파견근무 중(총 14명) ○ 추가 인원 파견 관련, 초국경범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증가 현황 및 실태,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청과 협의, 필요성 여부 등 판단 예정임.
	5.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초국경범죄 대응 협력 동향과 관련하여 필요 시 중국과의 치안 협력 확대 방안 모색할 것	○ 초국경범죄 대응 관련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양국 경찰기관 간 공동 대응 양해각서를 체결(25.11.1.)하고, 실무 부속서(액션플랜)도 체결(26.2.10.)하였음. ※ 매년 정기적인 고위급·실무급 회의 개최를 통해 구체적 대응방안 등 협의 ○ 초국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양국 경찰기관 간 상시 정보교류 체제유지와 수사단서 및 증거자료 제공, 수사팀 상호 파견 등 실제적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
	6. 서해 중국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 접촉 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과 국내 우려를 명확히 전달할 것	○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을 견지 중이며,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종측에 지속 전달하고 있음.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겠음.
	7.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다자 계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 지난 11월 및 1월 한중정상회담의 내실있는 성과 거양을 위하여 분야별 후속조치를 공관장 주도 하에 공관 차원에서 충실히 챙기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대응 철저히 할 것	있으며 본부와의 긴밀히 소통중임. ○ 제33차 APEC 정상회의(11.18-19)가 올해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만큼, 동 계기 정상회담 등에서 한층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관장을 중심으로 주재국 정부 접촉을 강화하는 등 충실히 준비하겠음. 또한 개최지를 관할하는 광저우총영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8. 중국의 반간첩법 적용 사례 및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국민의 신체·재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보고할 것	○ 우리 대사관은 대사관 홈페이지, SNS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주의사항을 지속 안내 중이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외교부 본부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 중임. - 우리 국민 사안을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관련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대응 중임.
	9. 중국 내 납치·감금 등 사건 사고 중 미제 사건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점검하여 본부에 서면 보고할 것	○ 당관 영사 관할지 내 발생한 납치·감금 등 강력사건을 포함한 기타 사건사고 중 미제사건은 없으나, 여타 지역의 미제 사건을 재점검 보고 예정임. ○ 향후에도 관련 사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시 즉시 본부에 서면 보고할 예정임.
	10. 중국 내 한국인	○ 당관 관할지 내 우리국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감자 현황 관련, 수감자 수를 범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정기적인 현황 업데이트 및 추가 보고를 실시할 것	수감자들에 대한 범죄 유형별로 분류 및 관리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6개월에 1회 중국 교정당국에 공한을 발송하여 수감자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현황 업데이트 중임. ○ 신규 수감자 발생 시 수시로 본부에 보고하고 있음.
	11. 재외동포 담당 영사 파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재외국민 및 동포 보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	○ 기 조치되어 재외동포청 직원이 영사로서 직무 파견되었음.
	12. 여행 안전 관련 공지 및 안내 시, 공지내용이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표현과 전달 방식을 더욱 세심히 검토할 것과 언론보도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것	○ 관련 공지 및 안내 시 표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공지 내용이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 ○ 아울러 언론 대응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및 메시지 관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음.
주상하이 총영사관	1. 사증 업무 급증에 대비, 사증 업무량, 불법체류율,비자신청센	○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사증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현행 인력과 예산으로는 안정적인 사증업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터 운영 실태 등을 근거로 객관적인 인력·예산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	수행에 한계 ○ 향후 사증 업무 관련 정량 및 정성평가 등을 바탕으로 필요 인력 파악,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인력·예산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예정 - 사증 접수량 추이, 직무분석, 주요 국가별 사증 업무량 및 인력 비교를 통한 표준 업무량 파악 등 정량적 분석 실시 - 민원(서비스) 불만족, 심사 품질 저하에 따른 위변조 서류, 불법체류 발생 등 위험도 평가, 조직 불안정성 등 정성 지표 마련
	2. 공관의 안내 및 공지가 방문을 위축시키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시의적절한 안전공지는 지속 시행 예정이며, 안내 및 공지 게재 전 세심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나가겠음.
주캄보디아 대사관	1. 캄보디아 내 스캠·인신매매·감금 관련,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검거·구금된 인원에 대한 국적별·사안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할 것	○ 캄보디아 내무부에서는 '25년 66개국 출신 13,577명의 외국인을 검거하여 추방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음 ○ ①중국 4,806명 ②베트남 3,456명 ③인도네시아 1,476명 ④파키스탄 963명 ⑤태국 534명 ⑥대만 383명 ⑦인도 345명 ⑧미얀마 247명 ... 한국 222명
	2. 캄보디아 내	○ 증가하는 재외국민 보호 수요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스캠·인신매매·감금 관련, 우리 국민 구금·감금 실태에 대한 신뢰 가능한 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즉응하기 위해, 경찰 주재관을 6명(기존 2명)으로 증원하였으며, 행정원 또한 6명(기존 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스캠·인신매매·감금 관련 통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에서 체포·구조된 우리 국민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중임
	3. 스캠 단지 탈출 우리 국민에 대한 문전박대·소극적 대응 논란 관련, 업무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위기 상황 시 즉각 보호·접수 원칙 명확히 하고 공관 출입·초기 응대 절차 전면 점검·개선할 것	○ 일과시간 외에도 휴일·야간·새벽 시간대 공관을 찾아오는 자진이탈자 보호를 위해 △공관 외곽을 지키는 경찰·경비원 대상 주기적 교육(임시보호 및 영사 연락) △대사관 정문에 대표전화·당직전화번호를 게시한바 있음. ○ 우리 국민이 대사관을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영사와 실무관이 대사관에 진출하여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음.
	4. 의원실 등 외부 주체에 의해 구출이 이루어졌다는 지적 관련, 의원실·관계기관과의 협조 경과를 명확히 정리·보고하고,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공관 주도의 일원화된	○ 대사관에서 스캠 관련 납치·감금 신고 접수 시 인적사항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코리아전담반’과 공유함 ○ 코리아전담반에서는 감금 의심지역 주변 탐문, 주민 진술 청취와 같은 확인을 거쳐 구조 작전을 전개하는 등 공관 주도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25.12. 발족한 이후 '25.3.까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	우리국민 5명 구조(164명 체포) 하였음.
	5. 로맨스스캠 적색수배자 대응 관련, 적색수배자의 여권·영사 민원 처리 기준 재정비할 것	○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공관을 방문할 경우 '25.12월 배포된 본부 매뉴얼에 따라 처리 중임.
	6. 로맨스스캠 적색수배자 대응 관련, 자수 권고, 송환 가능성, 본부 및 수사기관과의 협조 절차를 재검토하고 명확히 할 것	○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공관을 방문할 경우 '25.12월 배포된 본부 매뉴얼에 따라 처리 중임.
	7.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사고 관련, 접수 주체(본인·가족)·피해 유형(납치·감금·취업사 기)·처리 단계별로 체계적 분류 자료를 제출할 것	○ 온라인 스캠에서 비롯된 납치·감금 사건 중 미종결된 사건을 중심으로 접수 주체, 피해유형, 처리 단계별로 자료를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8. 미결 사건의 원인(소재 미확인, 협조 부족 등)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	○ 온라인 스캠에서 비롯된 납치·감금 사건 중 미종결된 사건을 중심으로 접수 주체, 피해유형, 처리 단계별로 자료를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9. 박모 씨 사망 사건	○ (최초인지) '25. 8. 9.(토) 주재국 연락 접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관련, 최초 인지 시점부터 1·2·3차 보고 시점 및 보고 내용을 명확히 정리·제출할 것	○ (아국인확인) '25. 8. 10.(일) 지문 대조 결과 ○ '25. 8. 11.(월) 아국인 사망사실 본부 보고 - 이후 본부에 동 사안 관련 확인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고하였음.
	10. 박모 씨 사망 사건 관련, 사인 추정, 구타 흔적, 납치 여부 등 핵심 정보가 축소·지연 보고되지 않도록 보고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	○ 사건 관련 주재국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였음.
	11. 대사 공석 장기화 관련, 대사대리의 대외 접촉 범위 및 한계 명확히 정리, 대사 공석이 고위급 소통·치안 협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신임 대사의 조속한 부임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것	○ 김창룡 신임 대사가 지난 '25.11.28. 발령된 후 '25. 12. 5. 부임하여 공관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재국 고위인사들과 수시 접촉하면서, 재외국민보호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12.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중국계 조직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 '25.10. 정부합동대응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온라인 스캠 근절 공동대응을 촉구한 바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정황 관련, 중국계 범죄조직 및 현지 유착 구조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하고 필요 시 한·중 및 한·캄 간 치안 협력 강화를 본부에 건의할 것	○ '25. 11.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청이한국인과 관련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음 ○ '25. 12. 코리아전담반을 발족하고 온라인 스캠 관련 우리국민 구조·검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13. 여행경보 및 여행금지 조치 관련, 교민 거주 지역과 범죄 다발 지역을 구분한 정밀 위험 평가 실시, 여행금지 조치가 교민 생계·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여 본부에 보고할 것	○ 국경 분쟁 지역과 온라인 스캠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경보를 발령한바 있음 ○ 온라인 스캠 사기 피해 상황, 관광객 감소에 따른 교민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부에 여행경보 조정을 건의하고 있음
	14. 스캠 피해 예방 및 사전 차단 위해 캄보디아 입·출국 동향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층 대상 취업사기·스캠 경보를 강화할 것	○ 주재국으로부터 입출국 동향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가겠음. ○ 한편, 우리 국민이 온라인 스캠과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찾는 일이 없도록 인식확산 노력을 경주하겠음
	15. 재외국민 보호 업무 급증 대응 관련,	○ 증가하는 재외국민 보호 수요에 즉응하고 적기 보고하는 체계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찰협력관 추가 증원 효과 점검 및 영사·행정 인력의 업무 과중 실태 분석하여 중장기 인력 확충 방안 마련할 것	갖추기 위해, 경찰 주재관을 6명(기존 2명)으로 증원하였으며, 행정원 또한 6명(기존 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재국 내 스캠·인신매매·감금 추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관련 상황보고를 철저히 하여 재외국민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음
	16. 여권·자금·연고가 없는 피해자(사실상 무연고자) 지원 관련, 공관 차원의 지원 기준 명확화 및 담당자 개인 부담에 의존하는 관행 개선할 제도적 보완책 마련할 것	○ 본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스캠단지에서 자진이탈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긴급지원비를 선지급하고 사후 승인받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17. 캄보디아 치안 역량 강화 위해 코리안데스크, 합동 TF 등 기존 협력 틀 실질화, 치안·교육·수사 역량 강화 포함한 ODA 연계 방안 본부와 협의할 것	○ '25. 11. 한-캄이 MOU를 체결하였으며, 코리아전담반을 발족하여 온라인 스캠 관련 구조·검거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 증진을 위해 관련 협의를 거쳐 '26년 신규 치안분야 ODA 사업(2건)을 시작할 예정임
	18.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본부 보고의	○ 증가하는 재외국민 보호 수요에 즉응하고 적기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경찰 주재관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적시성·충실성에 대한 내부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	6명(기존 2명)으로 증원하였으며, 행정원 또한 6명(기존 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재국 내 스캠·인신매매·감금 추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관련 상황보고를 철저히 하여 재외국민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음
주베트남 대사관	1. 베트남 또 럽 당서기장이 한국 국민 방한 직후 북한을 방문한 배경과 의미, 그리고 베트남의 남·북한 병행 외교 노선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외교적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 우리 대사관은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북-베 관계 동향에 대해 주시하면서 한베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베측과 긴밀한 소통 및 의견 교환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베 간 교류와 소통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있음.
	2. 최근 호치민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 현지 치안 당국과의 협력, 우리 국민 대상 예방 안내를 강화할 것	○ 주재국 치안 당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한인 관련 범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비 신속한 공조 체계 구축 및 유지 중 - 초국가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주재국公安부의 핵심 부서 및 국방부(국경수비대)와도 협력 폭 확대중 ○ 우리 국민 대상 범죄예방 교실을 실시하여 범죄 피해 방지 및 연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예방 요령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인회, 한국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임. - 특히, 주재국 체류·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 교민 단톡방 등 SNS를 이용하여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중
주태국 대사관	1. 주 23회 직항편이 운항 중인 치앙마이 지역에 대해 분소 또는 영사 기능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027년 정기직제 관련, 태국 북부지역 영사기능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분관 신설 요구 제출(2.23.) ○ 정기직제 요구 반영시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태국 북부 지방 12개 주를 관할하는 분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재외국민 안전·보호활동 강화, ▲온라인 스캠센터·마약 및 도박 등 초국경범죄 문제 대응 능력 제고 예정
	2. 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국가 방문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내 출국 공항 단계에서 출국 심사 및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캄보디아 스캠센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국내 출국단계 안내 강화 조치가 시행중 ※ ▲자동출국심사대 통과시 안내 문구 표출, ▲탑승 게이트 앞 안내문 배포, ▲불심검문 강화 등 ○ 이외에도 우리 대사관은 ▲여행경보 상향,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국경검문소 안내판 설치, ▲안전공지 등 방안을 시행중 ○ 앞으로도 주재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관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당국과 대응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
주미국 대사관	1. 3,500억불 대미투자 실행방안 관련 3년 이내 업프런트(upfront)로 지불할지, 분납할지에 대해 진전된 상황 관련 대사가 보고받은 바를 보고할 것	○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르면 대미 투자 약정은 '29.1월까지이나 외환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제 투자 집행은 일시 납입이 아닌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in tranches) 지출될 예정임. - 또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를 통해 투자자금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자금 납입 규모와 시기를 미국과 협의가능토록 하였음.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살펴보고 보고할 것	○ 우리 대사관은 美 행정부, 의회 및 싱크탱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전력운용 및 주한미군 주둔 태세 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 중 - 아울러, 주한미군 관련 본부 담당 부서 및 우리 국방부(무관부) 등과도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진행 ○ 특히, 2026.1월 美 국방전략보고서(National Defense Strategy)가 새롭게 발표된바, 동 보고서가 주한미군 전력구조 및 태세 변화에 미칠 영향 등 관련 사항을 계속 예의 주시해 나갈 예정
	3. 조선 협력 관련 최근 미국 내에서 발의되는	○ 조선 관련 미 의회 내 주요 상임위 청문회 및 입법 동향 등 수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들에 대해 어떤 역학이 작동되고 있는지 각 지역구의 특색을 감안하여 살펴볼 것	모니터링과 함께, 법안 대표 발의 의원·보좌진 대상 적극적 아웃리치 실시 중 - 현재 119대 의회 내 조선 관련 가장 대표적인 법안으로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외에도, 해군/해안경비대 준비태세, 해운, 조선소 및 동맹과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 - 미국 내 주요 조선산업 소재지인 서부(캘리포니아), 남부(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동부(버지니아, 뉴욕, 코네티컷, 메인) 등은 전통적으로 Jones Act 등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한 지역 ○ 지역구 내 관련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등 감안, 작년말 대사관·총영사관 협업 下 루이지애나·미시시피 지역을 방문하여 한미 조선 협력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성을 설득하기 위한 Bottom-up 방식의 아웃리치 실시 - 향후 미주지역 거점공관으로서 대사관 주도 下 각 총영사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지역구별 맞춤형 아웃리치 전개 및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관련 동향 파악 등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
	4. 미국의 조선 관련 법률 문제에 있어 한정된 영구적인 예외 조항은 태스크포스에서 검토 후 해당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	○ 미국의 국내법적 제약사항을 포함하여, 미 행정부와 한미 조선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협의 중임. – 아울러, 美 의회·싱크탱크·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음. – 미국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Maritime Action Plan, 26.2월)에 초기 선박 물량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Bridge Strategy”가 포함된바, 이를 기반으로 미측과 구체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5. 공관의 영사 관련 매뉴얼 관련, 영사조력의 한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 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보여줄 것	○ 우리 대사관은 트럼프 2기 이민정책 관련 재외국민 보호 차원의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마련(2025.2.19.)했으며, 동 매뉴얼에 우리 기업인 구금자 발생을 가정한 상세 대응 요령을 추가(2025.9.10.)하는 등 수시 검토 및 보완해 오고 있음. –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영사조력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하에 영사조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
	6.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시민권	○ 우리 대사관은 입양인 시민권법안에 대한 미국의회 내 지지 확보 및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미취득 한인 입양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만들 것	입양동포 관련 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등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재외동포청에서는 한인 입양동포 권익보호 단체의 활동(캠페인/워크숍, 법률구조, 시민권 취득 절차 지원 등)을 지원 중으로, 시민권 미취득 입양동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재외동포청 및 미국 지역 재외공관과도 지속 협력해 나아갈 예정
	7.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관련, 공장 등 현장에서의 재하청 문제 등에 대해 공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기업 및 당국과 소통할 것	○ 우리 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은 관할 지역 내 현지 진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에게도 미국의 관련 법 준수 필요성 등을 설명해오고 있음. - 당국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및 현장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관련하여 미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임.
	8. 한화 자회사 등이 MASGA 프로젝트 관련하여 중국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것이 아닌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	○ 中 상무부는 '25.10.14.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해 미국의 301조 조사에 협조, 지원하였음을 이유로 중국의 기업·개인과 거래 및 협력 활동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中측은 11.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동 제재 조치 시행 1년 유예를 결정함. * ▲ Hanwha Shipping LLC, ▲ Hanwha Philly Shipyard Inc., ▲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 Hanwha Shipping Holdings LLC, ▲ HS USA Holdings Corp ○ 당관은 동 과정에서 MASGA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왔음.
	9.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법정부(외교·과기·산업부) 차원에서 미국 에너지부 포함 정부 간 협의를 해 오고 있음. - 당관도 미 정부 기관과 그간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예정임.
	10. 우리 유학생에 대한 미 당국의 SEVIS 종료 통보 등에 대한 초기 법률 자문 등 조력 현황을 보고할 것	○ 우리 대사관은 미국 정부의 비자 취소 및 SEVIS 종료 조치를 받은 우리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관 자문변호사 연결 등 초기 법률 자문 지원 및 유학생 간담회를 실시함. - 초기 법률 자문 지원(3회) : 공관으로 연락해 온 대상자 3명에 대해 공관 자문변호사 자문 지원 및 변호사 연결 ※ 조지워싱턴대생(4.7), 애리조나주립대생(4.9), 메릴랜드주립대생(4.15) - 유학생 간담회 개최(4회) : 우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주재관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업무성과 평가 구체화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대사관 영사업무 관할지역 내 주요 대학 유학생 대상 간담회 실시 ※ 조지타운대학 학생회(2025.3.14), 조지메이슨대학 학생회(2025.3.20), 리버티대학 학생회(2025.4.12), 워싱턴 지역 주요 대학 학생회(2025.4.15.) ○ 우리 대사관은 매년 2차례(상·하반기)에 걸쳐, 모든 주재관들을 대상으로 정기활동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간의 업무 성과를 ▲정보성 실적, ▲활동성 실적, ▲여타 공관업무 지원 실적, ▲민원·기타 업무실적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 중임. - 반기별로 주재관들의 업무 성과를 능력·태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기여 중 ○ 한편, 우리 대사관은 주재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외교활동 강화를 위해 본부에서 실시하는 ‘주재관 전문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주재관들이 주재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정책 홍보, 상호 협력 확대, 우리 교민·기업 지원활동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임. - ‘25년에는 주재관 역량강화 사업 3건을 신청하였으며, ‘26년에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을 독려할 예정
	12. 미국 내 진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무슨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	○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E-2(투자자), L-1(주재원) 비자를 활용하고 있음. - 단기 파견 인력의 경우, B-1(상용) 비자 및 ESTA도 활용 - 당관은 앞으로도 비자 활용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해나갈 것
주유엔 대표부	1.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관련, 제재 하 인도주의적 교류 및 인도주의적 면제 조항 등 국제무대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 유엔 안보리 이사국, 북한제재위 담당 유엔 사무국 등과 수시 협의를 통해 대북 제재 인도적 면제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안보리 절차상 작년 상반기부터 총 17개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제 면제가 발급되지 않은 채 수개월 간 보류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제제 면제가 부여되었으며, 이후에도 인도적 면제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 중임.
주뉴욕 총영사관	1. 공관에 대한 구글지도상 리뷰 관련,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을 체계적으로 챙길 것	○ 민원인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근 민원실 운영시간을 확대(3월부터 시행) ○ 아울러, 민원실 친절도 개선을 위해서도 현재 온라인 친절교육 의무수강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초청 친절교육(반기 1회)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실시하고, 민원인 친절도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인들이 칭찬하는 직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
	2. 트럼프 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관련 교민들의 불편 및 불안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할 것	○ 한인회 포함, 시민참여센터, 뉴욕가정상담소, 민권센터 등 취약·소외 계층 및 체류자격 미비 한인 지원 동포단체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관련 사례 유무를 점검해 왔으며, 추후에도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
	3. 한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총영사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회 등 각 지역 한인회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애로사항 등을 수시 청취하고, 동포사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지속 협의 중 ○ 아울러, 재외공관 주도 차세대 동포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한인 1.5세·2세들이 기존 동포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교류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인 동포사회가 지속 유지·발전되도록 지원 예정 – 관련 사업 예산을 旣 확보함에 따라 동포단체, 우리 기업 등과 협업하여, 금년 하반기 중 행사 개최 예정 ※ 미동북부 청소년 리더십 포럼, 북미지역 차세대 네트워크 등 지원
	4. 셀트리온의 뉴저지	○ 관세국경보호국(CB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공장 인수 관련 시설 변경 및 증설 과정에서 조지아 주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이민세관단속국(ICE) 방문 면담을 既 실시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원활한 출입국 지원을 당부하고, ▲우리 경제계의 대미 투자와 경제협력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실무 협력 공감대 형성 노력 경주 - 한국 경제계의 활동과 미국 지역경제 기여에 대하여 우호적 입장을 확인
	5. 뉴욕시의 단기 렌트 규제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	○ 총영사관에 접수된 구체 피해 사례 無 ○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교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을 정리한 안전공지를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2025.10.22.) ○ 향후 관련 규제 동향 및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안내 및 공지를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
주토론토 총영사관	1. 한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지적내용 동포 대상 국적 안내	○ 동포 대상 민원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 등 주요 민원 내용 적극 홍보 - 찾아가는 온라인 민원 상담회(국적, 병역, 국민연금 등) 개최('26.2.11.) - 순회영사 계기, 개별상담 지속 추진
	2.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고지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지 경찰과	○ 구체 처리내용 - '25.10.21. 공관 홈페이지 등 안전공지, 한국국적자의 마약류 관련 주의당부 - '25.10.23. 워킹홀리데이 간담회, 마약관련 유의사항 당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협조하는 등 방법을 강구	- '25.10.28. 마니토바주 위니펙시 경찰청장 등 지휘부 면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마약류 예방 협조 - '25.11.13. 광역토론토 한인 법집행기관 종사자 심포지엄, 마약 관련 경각심 제고 - 마약 관련 안전공지 배너 총영사관 민원실에 연중 설치중
	3. 재외공관의 업무 수요와 관련하여 현지의 의견을 본부에 보고	○ 우리 공관은 가용한 인력 범위내에서 재외국민·동포 및 영사민원 업무에 중점을 두고 공관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 공관 업무 수요 관련 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중으로, 현지 외교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을 본부에 적극 건의 예정. * 민원업무 중요성, 당지 동포사회 규모 감안시 외교직원보다 행정직원 증원이 효율적
주페루 대사관	1. 리마 메트로 3·4호선 건설 수주를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공관 차원에서 노력할 것	○ 페루 발주기관(투자청·교통통신부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입찰정보를 파악하여 우리기업에게 적기 제공하는 등 수주활동 적극 지원 예정
	2. ODA 사업의 분절화 방지를 위해 공관 차원에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구체적 관련	○ 금년 ODA 현지협의체 및 K-이니셔티브 ODA 분과위 운영, 사업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ODA 사업 분절화 방지 및 효과성 제고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언을 보고할 것	노력 예정임.
주브라질 대사관	1.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상파울루총영사관과 함께 방안을 논의할 것	○ 주상파울루총영사관과 한인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치안, 한인 상권 경쟁력 제고, 차세대 정체성 확립 및 네트워크 강화 등)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으며, 대사관 차원에서도 동포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차세대 동포행사를 개최(2.28.)하는 등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 중
	2. 브라질의 주요 인사들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일 것	○ 정부인사 (대통령실 보좌관, 외교차관, 산업차관, 주지사, 군장성 등) 및 의회인사(2025년도 18명) 수시 접촉 중 ○ 공관 지원으로 성사된 브라질 의원단 방한 2건(2025.8월 4명, 2025.11월 5명) ○ 특히, 금년도 룰라 대통령 국민 방한(2월) 등 고위급 교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유망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회인사 대상 교류를 지속 심화해나갈 계획
	3. MERCOSUR와의 무역협정 단절 관련,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공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	○ 양국 정상회담('26.2.23) 후속조치로 한-MERCOSUR 협상재개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재국 외교부 경제차관보(3월), APEX(무역추진진흥공사)청장(3월) 면담에 이어 주재국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장관(4.7), 대외무역위원회(4.7), 산업·농업계 관계자(4월중) 면담 추진
	4.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대사관을 중심으로 무역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관련, 공관이 브라질 현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허브 역할을 할 것	종합상사, 물류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22.1월 ~) ○ 공급망 및 수출·수주 지원 TF 개최('23년 5회, '24년 3회, '25년 2회) ○ 중동 상황 관련 브라질 공급망 동향(3.24) 및 고의존 품목 대체 수급선 파악 보고(3.25) ○ 중동 전쟁 관련 자원 공급망 확보 관련 화상 회의 참석(외교차관 주재 3.25,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3.31)
	5. 브라질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관련, 양국 청년 사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살펴볼 것	○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26.2월)시에도 양국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 교류를 증진시켜나가기로 합의 ○ 우리 대사관도 본부 및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협력하여, 재외공관 워킹홀리데이 활동 이행 사업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온라인 채널(SNS, 홈페이지)과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 중
	6. 총영사관 수요 및 공관 내 인력 증원 수요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여 본부에 제안할 것	○ 상파울루총영사관 관할 외 우리 동포가 많은 지역은 마나우스인데, 총영사관을 추가 설치하기에는 재외국민수가 적은 편임(450여명). 다만,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정기 순회영사 방문, 명예영사 임명 등 대사관-한인사회간 소통 창구를 통해 영사업무 수요에 대응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경제외교역량 강화(특히 한-브라질 농업협력 강화)를 위한 농림축산 주재관 신설을 '26.2월말 본부에 기 요청(27년 소요정원 조사)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1. 우리 정부가 보유한 야따마우까 농장의 향후 활용방안을 고민할 것	○ 주아르헨(대)는 외교부 본부, KOICA(파라과이 사무소)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야따마우까 농장 활용방안을 지속 검토중이며, 야따마우까 농장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외교부 본부 에 보고(2026.2월)
	2. 한-아르헨티나 사이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질 것	○ 주아르헨(대)는 양국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매년 활발한 문화사업을 실행 중임. - 2025 EXPO COREA, 찾아가는 문화원, 김치의날 행사, 한국문화의달(11월) 등 다양한 문화교류 증진 사업 기추진 ○ 2026년에도 K-뷰티 FIESTA, 찾아가는 K(지방 대상 문화교류 확대), 김치의날 행사, 한국문화의달(11월) 등 다양한 문화·경제 융복합 행사 추진 예정
	3. 아르헨티나 정국 상황 관련, 대규모투자촉진제도(RIGI)에 대한 예측	○ 주아르헨(대)는 아르헨티나 국내 정치·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RIGI 관련 포스코 리튬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가능성에 대해 공관이 면밀히 살펴볼 것	있도록 적극 지원중임.
주칠레 대사관	1. 지속가능한 광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칠레 정부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볼 것	○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 광업부 및 국영동공사(Codelco), 국영동위원회(Cochilco), 칠레광물공사(ENAMI)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주재국 광업 분야 진출을 지속 지원해 왔음. ○ '26.3월 정일영 경축 특사의 칠레 Kast 대통령 취임식 방문 계기 신임 경제개발관광부 겸 광업부 장관과 양국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함. ○ 한-칠레 광업 협력 확대·강화 및 우리 기업의 주재국 광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Korea-Chile Critical Minerals Connect 2026」(4.14., 산티아고) 개최 예정임.
주로스앤 젤레스 총영사관	1. 교민 사회 세대교체에 따른 지역별 센터 중심 영사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우리 총영사관은 교민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영사 민원 수요가 높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순회영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오렌지카운티 경우 한인회에서 출장소 유치를 강력 희망하고 있으나, 단시일 내 출장소 설치가 어렵다면 순회영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 해소 방안임. ○ LA 외 한인동포 밀집 지역들의 순회영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본부에도 관련 인력 및 예산 확충 수요를 지속 제출하고 있음. ※ 2024년 전 세계 재외공관 순회영사 처리건수 47,000건 중 주LA총영사관이 약 22%를 차지 - 총영사관 순회영사 처리 건수 중에서 오렌지카운티가 약 60% 차지 ※ 순회영사 인력·예산 확충시 ▲오렌지카운티 주 1회→2회, ▲샌디에고 월 1회→2회, ▲피닉스 및 라스베가스 연 4회→6회로 확대 가능
	2. 총영사관 건물 신축 시 교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어 쉽게 찾아오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할 것	○ 신축 청사 2층에 다목적홀을 설치할 예정인바, 신청사 완공 시 총영사관과 한인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26.1월 신축 청사 실시설계 최종보고회에 제출된 도면에 상기 다목적홀 계획 포함
	3. 미국 ICE 단속 관련 우리 교민들에 대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영사 조력 등 교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우리 총영사관은 미국 ICE 단속 관련 동향을 안전공지 및 한인회·동포단체·유학생 비상연락망을 통해 전파해 왔으며, 충실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음. - 유선 접촉뿐만 아니라 필요시 구급시설 방문 등을 통해 교민들의 불안과 피해 감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
	4. “No King” 시위 등 현지 시위 발생 관련 교민들의 안전을	○ 우리 총영사관은 대규모 시위 등 교민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공관 홈페이지 및 SNS,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최우선으로 삼는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한인회·동포단체·유학생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사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음. - 이밖에도 LAPD 등 관할지역 법집행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한인타운을 포함한 한인 사회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5. 현지 치안 등을 즉각적으로 수집하여 본부와 소통 후 정리하여 유사시 재외국민들에게 알리는 네트워크 체계도 점검할 것	○ LA경찰국(LAPD), LA보안관국(LASD), 라스베가스보안관국(LVSD) 등 현지 법집행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치안 등 관련 동향을 본부에 보고하고 재외국민들에게도 유의사항과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음. - 일례로, 보이스피싱*, 차량 내 절도 등 특이한 범죄 수법과 사례들을 본부와 공유하고 한인회·유학생 등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 경우, ▲공관전화 사칭 방지를 위해 현지 통신사와 기술적 협조(다른 전화번호가 공관 번호로 전환되면 수신인에 표시), ▲'2026년 해외여행 안전가이드북'에 보이스피싱 내용 추가, ▲언론 인터뷰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6. 프로보노 제도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현안에 대응하는	○ 우리 총영사관은 매주 1회 공관 자문번호사가 교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 왔으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방안을 모색할 것	올해부터는 법무담당 영사도 상담에 동참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이밖에, 여러 계기 관할지역 한인번호사협회들과 협력하여 재외동포들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Know Your Rights” 책자 안내 포함)도 제공 중이며, 나아가 한인 검사협회, 한인 판사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한인 동포들의 입장이 반영된 사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7. 교민 안전 공지 등에 총영사관/출장소 대표전화 및 긴급전화 등을 표시하는 등 교민들에게 보다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작년 국정감사 직후부터 총영사관 안전공지에 대표전화와 긴급전화 번호를 함께 표시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국민 방문객과 교민들에게 체계적인 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026년 해외여행 안전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8. CBP, ICE 등 관계 당국과 꾸준한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으로 이를 제도화할 것	○ 미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에 따라 CBP, ICE 포함 관할지역 법집행기관들과 꾸준히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지역별로 유사시 즉시 상호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여 휴일에도 우리 국민에 영사조력을 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문화·예술 인력 관련 미국 비자 발급에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볼 것	○ 총영사관은 우리 문화·예술·방송 인력의 관할지역 방문 계획을 인지하면 공연비자 발급 관련 유의사항을 적의 전파하고 있음. ○ 비자발급은 미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나, 총영사관에서도 지속 관심을 가지고 미 정부 면담 등 계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10. 등록 유권자 수 관련 오해가 없도록 향후 관리에 유의할 것	○ 국정감사시 최근 3차례 선거에서 투표율이 지속 증가했다고 답변했으며, 지적하신 것처럼 등록 유권자 수는 19대 대비 20·21대 대선에서 감소하였음. ※ 대선 등록 유권자 수 및 투표율 <table><tr><th>구분</th><th>19대</th><th>20대</th><th>21대</th></tr><tr><td>신고신청인수</td><td>13,631</td><td>10,271</td><td>10,341</td></tr><tr><td>투표자수</td><td>9,584</td><td>7,252</td><td>7,630</td></tr><tr><td>투표율</td><td>70.3%</td><td>70.6%</td><td>73.8%</td></tr></table> ○ 우리 총영사관은 21대 대선시 궐위선거로 인한 짧은 등록기간(90일)에도 다각적 선거 참여 홍보·독려 활동을 통해 20대 대선보다 많은 등록 유권자 수 및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구분	19대	20대	21대	신고신청인수	13,631	10,271	10,341	투표자수	9,584	7,252	7,630	투표율	70.3%	70.6%	73.8%
구분	19대	20대	21대															
신고신청인수	13,631	10,271	10,341															
투표자수	9,584	7,252	7,630															
투표율	70.3%	70.6%	73.8%															
	11. 우리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억울하게 추방당하는	○ 미 정부의 이민정책·단속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현지 치안·법집행 기관(LAPD, LASD,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질 것	CBP, ICE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에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음.
	12. 한미 경험의 최전선으로서 현지 진출 기업 간 민간협회 및 KOTRA 등 기관의 지원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컨트럴타워로 자리잡을 것	○ 우리 총영사관은 관할지역 소재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수출지원기관 및 8개 지자체 사무소와 현지 경제 동향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중소벤처기업지원협의회 등 계기 협업 방안을 논의해 왔음. ○ 특히, 2026년부터는 K-이니셔티브 총괄 협의체(경제·지자체/문화/교육 관련 총 23개 공공기관 참여) 및 산하 3개 분과위(경제/교육/문화) 운영을 통해 현지 기관들의 지원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융복합 사업을 추진·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3. 공관 내 예산 및 인력 부족 현황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	※ 우리 총영사관은 본부에 영사민원 인원 확충 수요를 지속 제출하고 있음. ○ (재외동포청 영사 확충) 2026.3월 재외동포청 직원 1명이 직무파견되어 동포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일부 영사들이 분담하던 동포청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체계적·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한글학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지원사업, 재외동포 파트너십 사업 등 ○ (순회영사 인력 확충) 원거리 관할지 순회영사 업무 폭증으로 순회영사 인력(행정직원 2명)이 필요하며, 관련 인원·예산 확충시 민원 서비스 제고 효과가 기대됨. ※ (오렌지카운티) 주 1회 → 2회로 확대 가능/ 2025년 기준 업무 건수는 약 6,000건으로 인력 증원시 연간 12,000건 이상 처리 가능 (샌디에고) 월 1회 → 월 2회로 확대 가능/ 2024년 기준 업무 건수는 약 1,500건으로 인력 증원시 연간 3,000건 이상 처리 가능 (라스베가스, 피닉스) 연 4회 → 6회로 확대 가능 / 출장 인원도 늘려 매회 민원접수 건수 확대 가능 ○ (영사민원 인력 확충) 총영사관의 매년 영사민원 처리 건수는 9만건 내외로, 현행 인원*만으로는 업무가 과중한 상황임. * 현재 기준 영사 3명(주재관, 직무파견 포함)이 하루 평균 여권(임시여권 포함) 약 30건, 사증 약 25~30건, 공증(영사확인) 약 90건, 국적 약 20건 처리 - 최근 외교부 감사 결과 민원 영사들의 여권·공증 서류 직접 심사 및 영사민원 업무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이를 위한 인력 충원이 절실
	14. 흥사단 본부	○ 우리 총영사관은 흥사단 본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리노베이션 관련 보훈부의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살펴볼 것	리노베이션 사업을 위해 국가보훈부 및 관련 동포단체들과 협력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25.12월 흥사단 본부 리노베이션 착공식 국가보훈부 대표단 현지 활동 지원 등 협조 - 간담회, 동포행사, 동포언론보도 등 각종 계기 동포사회의 다양한 의견 및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에 전달 등 ○ 앞으로도 총영사관은 흥사단 본부 리노베이션 완공 및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적의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임.
	15. 총영사관의 대외활동 건수 및 재외공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이 감소하지 않도록 활발한 외교활동을 진행할 것	○ 2025년 상반기는 국내 상황으로 인해 총영사관 대외활동 건수 및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이 다소 저조했으나, 이후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올해도 우리 기업·교민 보호 및 활동 지원, 관할지역 정부·의회·주류사회 접촉, 주재국 중간선거·이란전쟁 포함 주요 동향 파악 및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이고 활발한 외교활동을 진행 중임. ※ 일례로, 금년도 공관장 대외활동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2024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증가함.
주생프란 시스코	1. 교민 사회 세대 교체에 따른 센터	○ 우리 총영사관은 세대 교체 등으로 영사 수요가 높아진 콜로라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총영사관	중심 영사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할 것	덴버(2회/연, 9시간/일), 콜로라도 스프링스(2회/연, 3시간/일) 지역에 순회영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출장소 설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출장소 설치 관련 조사 시에 영사서비스 수요 데이터, 현지 재외국민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출장소 설치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음.
	2. “No Kings” 시위 등 현지 시위 발생 관련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	○ “No Kings” 시위를 비롯하여 최근 중동 정세 관련 동향 등 당지 치안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음.
	3. 현지 치안 등을 즉각적으로 수집하여 본부와 소통 후 정리하여 유사시 재외국민들에게 알리는 네트워크 체계도 점검할 것	○ 관할지역 치안 동향을 상시 예의주시하며 공관 홈페이지·SNS 및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SMS 발송 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음.
	4. 프로보노 제도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현안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법률전문가 제도를 운용 중에 있으며, 북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NC)와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있음.
	5. CBP, ICE 등 관계 당국과 꾸준한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	○ 관련 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현안 발생 시 수시 접촉하고 있으며, 지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임.
	6. AI 네트워킹 생태계 지원 관련 구체적인 수치 자료 및 성과 실적을 제출할 것	○ 현지 AI 기업-우리기업간의 정례면담 등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AI 등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산업동향’을 매월 발간중이며, ‘실리콘밸리 인덱스’ 등 관련 인력·기업 통계 등을 수시로 파악·보고하겠음
	7. 전문과학관 확대를 통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거점공관의 역할을 다 할 것	○ 금년부터 ‘수출수주·과학기술 거점공관’으로 지정·운영중이며, 총영사 주재 정례적 유관기관협의회 및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내실화하여 거점공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중 ※ 전문과학관 확대는 업무수요 및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 예정임
	8. K-Food 진출을 위해 미국 음식 내 한식 보급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K-Food Night를 매년 개최하는 등 북가주 지역 K-Food 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중이며, 관련 행사 계기 지역사회 및 관계자 등에게 한식 홍보 등 강화 예정
	9. 벤처캐피탈 중심 투자 생태계 조성 전략 관련 국가 전략보고서	○ 스타트업 진출 가이드북, 투자현황 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동향을 기업 등에게 제공한 바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발간을 고민할 것	○ Bay Area Council 등 실리콘밸리 싱크탱크, 한국벤처투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벤처투자 생태계 현황 및 동향 등을 분석중이며, 향후 전략 수립시 참고 예정임.
	10. 우리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억울하게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질 것	○ 수감자 면담을 정기·수시 실시하여 건강상태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음.
	11. 샌프란시스코 내 한인타운 설립 관련하여 방안을 고민할 것	○ 당지 재외동포단체들의 한인타운 설립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향후 한인타운 설립 관련 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추진 동력이 확보된다면 샌프란시스코시정부 등 유관기관에 한인타운 조성 필요성을 적극 제기할 예정임.
	12. 총영사관의 대외활동 건수 및 재외공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이 감소하지 않도록 활발한 외교활동을 진행할 것	○ 관내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여 대외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분기별 집행 내역 현황 점검을 통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음.
주밴쿠버 총영사관	1. 공관이 북극항로 협력의 최전선에서 캐나다	○ 공관차원에서 현지 정부, 의회, 군(캐나다 태평양함대 사령부) 관계자 및 학계(주요 대학 및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산·학·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조선·에너지 기술력을 외교적 자산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싱크탱크), 기업계(방산, 에너지 관련 등), 외교단 등 접촉 계기마다 우리나라 조선·에너지 기술력과 북극항로 관련 협력 의지 등을 적극 홍보 중 - 특히, 캐나다 초계잠수함 도입사업 관련 2025.12월 한-캐 양국 정부, 학계, 기업계 등 초청하에 ‘방산협력 세미나’ 개최 등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 공급능력과 캐나다내 산업협력 및 일자리창출 관련 협력의지를 지속 전달 중 ○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캐나다 초계잠수함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시 북극항로 관련 캐나다의 정책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나갈 예정
	2. SIN(Social Insurance Number) 관련, 동명이인 오인 문제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할 것	○ 앞으로도 관련 상황 발생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SIN 주관부서인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 밴쿠버 지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명이인 오인 문제 등 우리 국민의 특이사례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구할 예정임. ○ 우리 국민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시 주무부처인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에 제출할 ‘동일인 증명’이나 신분 확인 관련 영사확인 서류를 신속하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발급해 줄 예정임.
	3. 주정부 주요 인사와의 긴밀한 소통 및 방한 추진을 이어나갈 것	○ 다양한 계기에 주정부 고위급(주수상, 장관) 및 한국 담당 실무급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방한·방문단 등 상호 업무계획 공유 및 협력방안 지속 논의 중 - 2026.1월 노스웨스트준주 수상, 2월 BC주 수상, BC주 전 영사단 담당 장관, BC주 문화체육장관, 3월 BC주 무역차관, 앨버타주 주한사무소 대표 접촉 등 ○ 앞으로도 주정부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방한 지원 및 우리 국민·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예정
	4. 밴쿠버총영사관이 캐나다 서부 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FTA 이후 시대의 통상외교를 선도할 것	○ 현지 정부 및 기업계와 긴밀히 교류 소통하면서 상호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공통의 관심영역 지속 발굴 논의 중 - BC주, 앨버타주, 노스웨스트준주 등 정부관계자 뿐만 아니라, 밴쿠버 상공회의소, 한-캐나다 비즈니스협회(CKBA), 에드먼턴 수소협회, 사스캐처원 연구위원회(에너지, 광물 관련) 등과 지속 교류하면서 경제협력 확대 기회 모색 ○ 현지 진출중인 우리 공공기관, 지자체 및 기업, 전문가들과도 협업 강화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코트라 밴쿠버 무역관, 한국가스공사 캘거리법인, 한국석유공사 캘거리법인, 경기도 파견관, 밴쿠버 지상사협의회, 한-캐나다 과학기술자협회(AKCSE) 등과 수시 소통하면서 상호 정보교류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방안 논의 ○ 앞으로도 한-캐나다 유관기관·단체와 지속 협업하고, 세미나 등 사업 통해 상호 네트워킹도 지원해 나갈 예정
	5. 교육원 설립 관련 교육부 및 외교부 본부에 보고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	○ 2020년부터 「밴쿠버 지역 한국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서명운동('22년 1,600여명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부 캐나다 지역 한국 교육원 설립을 건의 중인 상황 ○ 당관은 본부와 교육부에 향후 교육원 설립시 지역 동포들의 열망 등을 감안하여 당지를 중요 후보지로 검토해줄 것을 건의
	6. 캐나다 LNG 2단계 사업 관련 현지 상황을 확인하여 정보를 취합·보고할 것	○ 당지 정부, 기업 등과 수시로 접촉하고, 언론을 모니터링 하면서 LNG 캐나다 2단계 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본부에 수시로 보고 중 - 특히, 동 사업에 참여(지분 5%)중인 우리 가스공사 캘거리법인 및 사업 관련 가스파이프라인 담당 캐나다 기업(TC Energy)을 집중 접촉하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상세 동향 및 향후 전망 파악 중 ○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LNG 캐나다 2단계 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당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해 나갈 예정
	7. 워킹홀리데이 관련 강력범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	○ 밴쿠버, 캘거리 등 워킹 홀리데이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왔으며, 금년에도 4월 중 밴쿠버 워홀 간담회 개최 예정
주시애틀 총영사관	1. 한미 경제협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도시로서, 시애틀총영사관이 현지의 첨단 산업과 대한민국 미래 인프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	○ 첨단산업 분야 한미 경제협력을 위해 KSC(K-Startup Center), 재외동포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동 분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KOTRA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동 분야 동포인재의 국내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공관 예산현황 중 기본경비와 주요 행사 등 사업비 외 다른 항목에 대한 내역을 제출할 것	○ 공관 예산 현황 자료를 붙임 자료로 제출함.
	3. 주정부 주요 인사와의 긴밀한 소통 및 방한 추진을 이어나갈 것	○ 주정부 주요 인사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 - (국정감사 이후) 워싱턴주 부주지사 면담, 국무장관 주최 리셉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참석(25.10월), JBLM 1군단장 관저만찬(25.11월), 워싱턴 주지사 면담(26.2월), 워싱턴주 및 오리건주 상무장관 면담(26.2월) 등 ○ 2026년도 미국 주정부 인사 방한 초청대상자로 Bob Ferguson 워싱턴 주지사 방한을 본부 앞 건의 완료함. ○ 26.11월 워싱턴 부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 방한 예정임.
	4. 영사관 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홈페이지(고정공지), SNS, 카카오프렌즈 채널(가입자 약 1,800명)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또한, 당지 언론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적극 개진하고 있음.
	5. 워싱턴주 한인 교민 상대 폰지형 금융사기 예방에 관심을 가질 것	○ 관할지 내 안전세미나 및 주요 한인 단체 간담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및 폰지형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6. 포틀랜드 및 시애틀 등 관할지 내 현지 동향 및 치안 상황을 본부와 면밀히 소통하고 유사시 재외국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 영사협력원 및 주요 한인 단체와의 소통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 전파를 위해 주요 한인 단체 정보 수시 업데이트하고 있음. ○ 안전 세미나 및 간담회를 통해 관할지 내 주요 발생 범죄 예방 및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취할 것	대응을 위한 활동 적극 전개 중임.
	7. 빌게이츠재단과의 소통을 통해 국제 보건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 재단은 2026년 개소 목표로 추진중으로, 총영사관은 한국사무소 설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단 내 담당자(Sue Park)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8. 관할지 내 미등록 재외국민 비율이 높은 것 관련, 현장에서의 제도적 개선 가능 사항에 대한 제언을 강구할 것	○ 재외국민 등록을 위해 홈페이지,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 활동 전개하고 있음. ○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권장하여 재외국민 등록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9. 과학기술주재관 파견 또는 과학기술전문관 제도 강화 등 과학기술외교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금년도 과학기술전문관 배정 공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음.
	10. 영사 업무 관련 소통 어려움 등 후기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를 가질 것	○ 영사업무 불편 해소와 민원인들과 소통을 위해 담당영사가 주기적으로 민원실 방문하여 민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매주 민원실 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온라인에 올라온 후기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네덜란드 대사관겸 주헤이그 국제기구 대표부	1.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추진 및 결과 포함)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수시 파악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임. ○ 교과서 오류 시정을 위해 출판사 측을 접촉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 조사 협조 및 한국 관련 내용 오류 시정 사항 공유 등 활동 수행 중 - 주요 출판사인 Noordhoff, Malmberg, Walburg Pers Educatief社에 한국 관련 서술 추가·확대와 관련된 협조도 요청 - 5년간 추진 사업 현황 : 첨부1 참고 ○ 오류 미시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출판사측에 시정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며, 한중연과 협의하여 네덜란드 교재 내 한국 관련 서술 추가·확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 ○ (애로사항) 네덜란드의 경우, 각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육용 교재를 출판하고 있는바, 한국 관련 서술 추가·확대를 위해서는 주재국 정부(교육문화과학부)가 아닌 다수의 출판사를 개별 접촉해야 하는 실정 ※ 정부기관의 역할은 각 교육과정의 핵심목표 설정 및 커리큘럼 전반 개발에 국한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출판사들이 개별적으로 자율 출판 ○ (건의사항) 당관 교육 담당 직원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0.3명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네덜란드 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 ※ 당관 사업 담당직원(2등서기관 1명)은 문화·공공외교, 교육, 보훈, 홍보 등 여타 업무 병행
	2.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참석자, 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종합)을 보고할 것	○ (사업 추진 현황)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친한단체 활동 지원, 주재국내 한국학과 활동 지원 및 네트워킹,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연례·수시 추진 중 - 5년간 추진 사업 현황 : 첨부2 참고 ○ (애로사항) 네덜란드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연령층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대사관 주최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e Festival) 등 한국문화·공공외교 행사에 대한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사관 인력·예산 등 제반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규모있는 문화·공공외교 행사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 ○ (건의사항) 당관 문화·공공외교 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 네덜란드 내 접증하는 한국문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원·교육원 등을 네덜란드에 설치하여 더욱 적극적인 한국문화 홍보 및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공공외교 활동 추진 필요
	3. 헤이그 소재 국제기구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할 것	○ 청년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 헤이그 소재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해 동 국제기구 공석 직위 발생 시 이를 외교부 본부에 즉시 보고하는 한편, 해당 기구 접촉 계기마다 우리 국민 선발을 긍정 고려해 줄 것을 적극 독려 - 외교부 본부는 공관 보고를 바탕으로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 공석 정보를 게재(unrecruit.mofa.go.kr)하여 우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지원 ○ 특히 우리 대사관은 우리 청년들이 헤이그 소재 국제기구에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로 파견되어 향후 국제기구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국제기구와 교섭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 ※ 상금 헤이그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JPO는 ICC 2명, ICJ 1명, OPCW 2명('26.3월 기준) - 아울러,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프로그램(연 2회) 참석 대학생 및 당지를 방문하는 대학교 법률 전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헤이그 소재 국제기구 관련 동향을 안내하는 설명회 수시 개최중																	
주독일 대사관	1.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추진 및 결과 포함)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조사' 계기를 통해, 지난 5년간 총 13종 교과서 내, 36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여, 총 5종 교과서 10건^(*)에 대해 조치 완료함. ※ '21년(5건), '23년) 1건, '24년) 4건 - 나머지는 '차후 개정판 발간 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수령함. ○ 교과서 특성상, 개정판 발간 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시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음.																	
	2.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참석자, 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종합)을 보고할 것	○ 지난 5년간 부문별 사업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th>K-컬처 문화행사 (건수/참석자)</th><th>K-푸드 행사 (건수/참석자)</th></tr> </thead> <tbody> <tr> <td>2025</td><td>85건 / 173,751명</td><td>7건 / 384명</td></tr> <tr> <td>2024</td><td>89건 / 88,612명</td><td>8건 / 345명</td></tr> <tr> <td>2023</td><td>131건 / 25,520명</td><td>6건 / 2,744명</td></tr> <tr> <td>2022</td><td>161건 / 34,033명</td><td>3건 / 40명</td></tr> <tr> <td>2021</td><td>168건 / 9,407명</td><td>8건 / 45명</td></tr> </tbody> </table> * (세종학당) '21년 3곳 → '25년 5곳 확대	연도	K-컬처 문화행사 (건수/참석자)	K-푸드 행사 (건수/참석자)	2025	85건 / 173,751명	7건 / 384명	2024	89건 / 88,612명	8건 / 345명	2023	131건 / 25,520명	6건 / 2,744명	2022	161건 / 34,033명	3건 / 40명	2021	168건 / 9,407명
연도	K-컬처 문화행사 (건수/참석자)	K-푸드 행사 (건수/참석자)																	
2025	85건 / 173,751명	7건 / 384명																	
2024	89건 / 88,612명	8건 / 345명																	
2023	131건 / 25,520명	6건 / 2,744명																	
2022	161건 / 34,033명	3건 / 40명																	
2021	168건 / 9,407명	8건 / 45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어 학과) 독일 대학 내 한국어(학)학과 설치대학 총 6개, 한국어강의 개설 대학 총 20개 운영중. ○ 상기 사업 등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 확대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수도 베를린의 경우, 한식당이 100곳 이상이며 최근 수년간 급증세. ○ 독일의 경우, 대사관(문화원) 소재지(베를린)와 공공기관(코트라, aT센터 등) 지사가 있는 프랑크푸르트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협업에 다소 애로. - 중장기적으로, 관계 공공기관이 동일 지역, 동일 청사에서 근무하는 여건을 조성할 경우, 집적화 사업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1.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주재국 교과서 △집필진 한국초청 및 네트워크 구축, △출판사 대상 한국 관련 내용 개선 공식 요청 등을 통해 교과서 출판사 및 집필진의 한국 관련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중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벨기에 주요 교과서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을 방한 초청하여 한국문화 연수 진행('22년 3명/ '26년 2명 예정) ※ '22년 방한초청 사업 후 내용 개선 성과: △동해병기, △고려시대 금속활자 직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술 추가, △한국 역사 기술 확대 등 - 출판사 앞 대사관 공식 서한 발송('25년 7건 관련) 등 통해 오류시정 노력
	2.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할 것	○ 다양한 한국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비롯한 K-컬처 저변 확대 노력을 적극 경주중 - 주재국이 EU, NATO 본부가 소재한 유럽의 중심지인 특성을 감안, 현지 외교단 및 EU·NATO 관계자를 적극 초청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현지 외교단 대상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행사('24.9월),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전시 개막행사('25.6월), △벨기에 한국영화주간 개막식 리셉션('25.9월), △전통문화 전시 기념 누비한복 패션쇼 및 전통상차림 리셉션('25.11월) 등 - K-컬처와 산업간 융·복합 행사인 언박싱 코리아(KOREA Unboxed)를 통해 우리 상품의 현지 판촉과 수출 지원 등 경제적 가치 창출 ※ △제1회 언박싱코리아(24.11월), △제2회 언박싱코리아(25.10월) 개최 - 일방향적, 단발성 행사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명성과 전통을 가진 현지 예술기관 및 축제와의 연계사업 지속 ※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매년 5월) 참여 한국인 아티스트 및 심사위원 지원,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벨기에 공영방송(RTBF) 음악채널(Musiq'3)과 한국인연주자 협업 공연 개최(매년 6/10월), △현지 상영관 (시네마 갤러리, 시네마 팔라스) 협업 벨기에 한국영화주간 개최(매년 9-10월) 등 - 세종학당을 통해 현지인 대상 수준별 한국어 강좌를 활발히 운영중이며,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현지 공립학교의 방과후 한국어 수업 운영도 지원중 ※ 26년 현재 문화원 세종학당 및 브뤼셀 세종학당 등 수준별 총 약 40개 한국어반 운영중/ 현지 초중고 방과후 수업(9개) 운영중 ○ 일부 민간 기획사 및 대행사 주관 한류 행사에서 고가의 입장권, 운영방식 등에 의한 불만*도 관찰되는 바, K-콘텐츠 해외 진출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으로 기대 * 입장권 판매 후 일방적 행사 연기 통보, 아티스트 변경 등
	3.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상세내용을 제출할 것	○ 국정감사 수감 이후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상세내용 제출('25.10월)(붙임자료 참고) ○ Horizon Europe 아시아 국가 최초의 준회원국으로서 인공지능,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창출해나갈 계획					
주프랑크 푸르트 총영사관	1.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독일 내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기술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관련사항은 주독일대사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2.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할 것	○ (K-콘텐츠, K-푸드) 2024년부터 프랑크푸르트 소재 공공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K-콘텐츠, K-푸드 등 K-이니셔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문화공연(2023) ▲오버우어젤 한국의 날 행사(2023-2025) ▲유학채용문화박람회(2024, 2026) ▲K-Food Fair(2025, 2026) 등을 적극 추진 ○ (한국어) ▲독일 현지학교 내 한국어채택교 확대, ▲성인대상 한국어 강좌 운영, ▲한국어능력시험(TOPIK) 활성화 등을 통해 독일 내 한국어교육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799 1865 1457 1991"> <tr> <td></td><td>2020년</td><td>2025년</td></tr> <tr> <td>한국어</td><td>25개교</td><td>47개교</td></tr> </table>		2020년	2025년	한국어	25개교
	2020년	2025년					
한국어	25개교	47개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table><tr><td>채택교</td><td>322명</td><td>769명</td></tr><tr><td>성인대상 한국어 강좌</td><td>17강좌 207명</td><td>41강좌 508명</td></tr><tr><td>TOPIK 응시자 수</td><td>361명</td><td>749명</td></tr></table>	채택교	322명	769명	성인대상 한국어 강좌	17강좌 207명	41강좌 508명	TOPIK 응시자 수	361명	749명	
채택교	322명	769명										
성인대상 한국어 강좌	17강좌 207명	41강좌 508명										
TOPIK 응시자 수	361명	749명										
	3. 관할지역 우리 국민 대상 범죄(물리적 범죄 등) 관련 통계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서면 제출할 것	○ 관할 지역인 독일 3개 주(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우리국민 대상 범죄(사이버, 물리적 범죄 등 포함) 통계는 아래와 같음. <table><tr><td>2021년</td><td>2022년</td><td>2023년</td><td>2024년</td><td>2025년</td></tr><tr><td>7건</td><td>44건</td><td>76건</td><td>83건</td><td>86건</td></tr></table>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건	44건	76건	83건	86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건	44건	76건	83건	86건								
주룩셈부르크 대사관	1.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추진 및 결과 포함)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주룩셈부르크대사관은 신설(2024.7월) 이후부터 교과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해옴. - 신설 직후(2024.10월) 감사원 지적 주요 오류 중 1건 절판 확인 ※ 룩셈부르크 중등 교과서에 '1377년부터 1433년까지 중국영역으로 표시' - 다른 1건에 대해서도 룩셈부르크 정부, 출판사와 협의한 결과 해당 오류 교과서의 절판·미사용을 확인(2025.9월) ※ 룩셈부르크 중등 교과서에 '1760년경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 스페인 식민지로 표시' ※ ▲오류 시정 요구 공한 룩셈부르크 정부에 발송 및 설명, ▲교육부 장관 면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출판사(독일 소재)에 설명 등 노력 ○ 룩셈부르크가 외국 교과서를 수입해 사용하는 국가이고, 출판사 소재지가 독일이어서, 룩셈부르크 교육부 이외에 출판사에 직접 수정을 요청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음. - 타국에서 출판하는 교과서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국가 경우, ▲해당 교과서를 수입해와 사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판사 소재지 공관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 - 특히 주요국 대형 출판사 대상 아웃리치, 교과서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적절히 검토할 필요
	2.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참석자, 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종합)을 보고할 것	○ 주룩셈부르크대사관은 신설(2024.7월) 이후부터 다양한 K-컬처 행사를 통해 문화 선도국으로서의 한국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오고 있음. - 2025년의 경우, ▲K-클래식 공연 개최(9.22), ▲개관식 리셉션(9.26) 계기 K-푸드 및 한국 관광 등 홍보, ▲K-뷰티 워크숍 개최(10.17) 등 통해 룩셈부르크 내 한국 문화 홍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세종학당, 한인회, 문화원 등 유관기관 주최 한국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 ※ ▲세종학당 '한국 문화의 날' 행사('25.10월, '24.10월) ▲한인회 '한국 발전상 알리기(Korea Today)' 행사('24.10월) ▲주벨기에 문화원 협력 한국 영화제 ('24.11월) 등 ○ 우리 세종학당, 한글학교 뿐 아니라 현지 교육기관 등과도 협업하여 룩셈부르크 내 한국어교육 확산을 지원해나가고자 함.
	3. 룩셈부르크 소재 금융기업 등 다국적기업에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할 것	○ 룩셈부르크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으며, 일부 다국적 기업 및 기관에는 한국인이 일부 근무하고 있음. -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은 ▲지리적 위치와 ▲언어 여건(프랑스어, 독일어, 룩셈부르크어 공용어) 등에 기인 ※ PwC(회계), Rothschild(자산운용), Arendt(법률), 아마존(물류·IT), 아르셀로미탈(철강) 등에 한국 전문직 종사자도 일부 근무 ○ 주룩셈부르크대사관은 ▲우리 고용노동부, 주벨기에 KOTRA 사무소 등과 협업하여 룩셈부르크 취업 정보 제공,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한국 청년 취업 확대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덴마크 대사관	1. 지난 5년간 각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한국 발전상 기술확대 사업 내용(추진 및 결과 포함)을 사업실시 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제출할 것	□ 당관은 지난 5년간 △주재국 교과서 확보/개정 정보 확인 및 한국 관련 내용 개선,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시행 등을 통해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옴. ○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노력 - 덴마크의 초·중등학교는 지자체(kommune)가 학습자료를 공동조달하여 제공하고, 각 학교는 지자체가 승인한 목록 내에서 자율 선택하며, 고등학교는 학교·교사 자원으로 교재를 정하고 있음. 고등학교에서는 Systime이 사실상 표준 플랫폼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Praxis(자연·기술), Forlaget Columbus(사회·역사) 등이 과목 특성에 따라 병행 활용됨. Systime의 역사 교재는 82종이며, Columbus의 사회 교재는 60종 내외 규모임. - 당관은 그간 주재국 내 역사·사회 등 교과서 4종(Systime 고등학교 역사 과목 교과서 3종 및 Columbus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 1종)을 수집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Columbus 출판 교과서는 절판되었음을 확인함. - 이에 당관은 한국 관련 오류가 발견된 교과서를 발간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출판사(Systime) 측에 우리측의 시정 권고를 전달(2021.4월/2022.12월)하고, 오류사항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금년 8월까지도 반응이 별무하였음. - 당관은 2025.8월 해당 출판사 측에 교과서 개발 과정, 자료 출처 및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청취를 희망한다는 방식으로 면담을 재차 요청한바, 동 출판사 측은 당관의 면담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2025.9월 동 출판사 역사 담당 부장과 면담(9.19, 화상) 실시함. - 상기 면담시 당관은 동 출판사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사실 오류·표기 문제·사료 편향을 구체 사례로 설명하고 시정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출판사 측은 당관이 제기한 사실 오류 정정시 디지털판부터 우선 가능하다고 하고, 지도 표기 변경은 대체 표식·주석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당관과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함. ○ 주재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실시 - 당관은 2020년 당지 코펜하겐대학교 한국학과와 공동으로 주재국 내 고등학생 맞춤형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Online Module) 제작을 통해 주재국 내 한국 발전상 기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확대 사업을 실시함. - 해당 사업은 2020.10월-2021.1월간 한국 관련 주제에 대해 전문가를 초대하여 토론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덴마크어 자막과 함께 덴마크 내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습득하도록 돕고, 교사 및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 관련 수업자료로 활용하게끔 유도함. - 3편의 한국 관련 토론 영상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수업자료(온라인 모듈)로 제작하여 코펜하겐대학교 한국학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이를 누구든 접속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정 노력 성과 및 계획 ○ 그간 당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측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5년만에 주재국 대형 교과서 출판사(Systime) 측에서 당관의 면담 요청에 응해왔고, 화상면담까지 순조롭게 실시하는 한편 우리 측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당관의 끈기 있는 노력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 당관은 면담의 목적이 교과서 개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과정에서 상호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국 관련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강조함. - 최근 한국 관련 관심 증가 추세를 고려해 향후 신간에서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당관과의 상시 연락창구를 유지하기로 합의함. ○ 앞으로 당관은 주요 도시별 초·중등학교 교과서 목록과 더불어, Systime·Forlaget Columbus 등 주요 출판사의 고등학교용 역사·사회 교과서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등 주재국 내 교과서 수집·분석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특히 덴마크의 경우, 종이 교과서보다는 디지털 교재가 주로 사용되며, 해당 디지털판은 수시로 수정·갱신이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별 담당자, 공관 담당자 및 주요 교과서 출판사 간 온라인·오프라인 정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한국 관련 기술 오류의 신속한 시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아울러, 한국 관련 내용의 정확성 제고와 기술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친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당관이 주최하는 각종 문화·교육행사에 교과서 집필자 및 출판 관계자를 적극 초청하고, KF·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방한 초청사업에도 주재국 출판사 및 교육 당국 관계자를 우선 추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애로사항) 덴마크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나라로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가 민감성을 가질 수 있으며, 무리하게 독촉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 (건의사항) 앞으로 당관은 주재국 주요 출판사의 교과서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보·분석해 나가면서 해당 출판사과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으로, 덴마크의 경우 디지털 교재가 주로 사용되고 수시로 수정 가능한 구조인 만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전문가의 주재국 방문 및 설명회 개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과서 관계자 대상 자료 제공 및 교류 확대 등 현지 중심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 및 수시 소통 채널 지정을 건의함.																		
	2. 지난 5년간 K-콘텐츠, K-푸드, 한국어교육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참석자, 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종합)을 보고할 것	☐ 지난 5년간 K-콘텐츠·K-푸드 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한국주간행사) 주덴마크대사관은 지난 5년간 덴마크 내 한류 관심이 증대되어 온 가운데 덴마크 국민들을 참여 대상으로 종합 K-콘텐츠 행사인 한국주간행사를 연례 개최해왔음. <2021-2025간 덴마크(대) 한국주간행사> <table><tr><th>연 번</th><th>기간·장소</th><th>주 최</th><th>참 여 인 원</th><th>행사명</th><th>프로그램</th></tr><tr><td>1</td><td>2021. 9.17.- 24 코펜 하겐</td><td>주 덴 마 크(대)</td><td>500명</td><td>2021 한국주간행사</td><td>·무용공연, 한국영화 상영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관광 전시회</td></tr><tr><td>2</td><td>2022. 9.15.- 18</td><td>주 덴 마</td><td>530명</td><td>2022 한국주간행사</td><td>·퓨전국악 및 무용공연,</td></tr></table>	연 번	기간·장소	주 최	참 여 인 원	행사명	프로그램	1	2021. 9.17.- 24 코펜 하겐	주 덴 마 크(대)	500명	2021 한국주간행사	·무용공연, 한국영화 상영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관광 전시회	2	2022. 9.15.- 18	주 덴 마	530명	2022 한국주간행사	·퓨전국악 및 무용공연,
연 번	기간·장소	주 최	참 여 인 원	행사명	프로그램															
1	2021. 9.17.- 24 코펜 하겐	주 덴 마 크(대)	500명	2021 한국주간행사	·무용공연, 한국영화 상영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관광 전시회															
2	2022. 9.15.- 18	주 덴 마	530명	2022 한국주간행사	·퓨전국악 및 무용공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코펜 하겐	크(대)			한식쿠킹클 래스, 한국영화상 영회
		3	2023.9. 16.-29 코펜하 겐	주 덴 마 크(대)	58 0 명	2023 한국주간행 사	·한식 쿠킹클래스, 합창 공연
		4	2024.9. 14.-9. 24 코펜하 겐	주 덴 마 크(대)	50 0 명	2024 한국주간행 사	· 한국다큐 멘터리 상영회, 한식쿠킹 클래스, 국악특강 창작국악 공연
		5	2025. 7.11.- 7.12 코펜 하겐	주 덴 마 크(대) , 한 인 회, 입 양 인 협 회	50 0 명	2025 한국주간행 사	· 국악공연, 탈만들기 워크숍, 김치쿠킹 클래스, 한복체험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주간행사 프로그램 선정 시 전통문화공연, 영화상영, 쿠킹클래스, 관광홍보 등 덴마크 국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고 있음. - 매해 약 500여명의 덴마크 국민들이 한국주간행사에 참가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이 동 행사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 2차 홍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덴마크 내 K-콘텐츠의 수요는 K-POP이나 영화 등 대중문화에 집중되어 있는바, 한국주간행사가 민간 차원의 K-콘텐츠 공급이 활발하지 않은 우리 전통문화나 생활문화에 대한 홍보의 장이 되었음. - 또한, 2025년 행사 시 주덴마크대사관이 한인회, 한인입양인협회 두 동포단체와 공동 기획·주최하여 재외국민 900여명과 한인입양인 8,000여명을 아우르는 동포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들이 한국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민간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K-푸드) 주덴마크대사관은 지난 5년간 한국주간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식 행사를 개최하며 덴마크 국민들을 대상으로 K-푸드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한 인지도를 지속 제고하였음. <2021-2025간 덴마크(대) 한식 행사> <table><tr><th>연 번</th><th>기간 ·장 소</th><th>주 최 인 원</th><th>행사명</th><th>프로그램</th></tr><tr><td>1</td><td>2021 .6.18 .-20 비대 면</td><td>주 덴 마 크(비 대) 대) 면)</td><td>20, 00 0 명 (비 대 대 면)</td><td>2021 코펜하겐 김치 페스티벌</td><td>·김치 쿠킹클래스</td></tr><tr><td>2</td><td>2022 .9.18 코펜 하겐</td><td>주 덴 마 크(대) 대)</td><td>30 명</td><td>2022 한국주간행사 한식 쿠킹클래스</td><td>·김치 쿠킹클래스</td></tr><tr><td>3</td><td>2023. 9.16 코펜 하겐</td><td>주 덴 마 크(대) 대)</td><td>80 명</td><td>2023 한국주간행사 한식 쿠킹클래스</td><td>·김밥, 야채전, 불고기 샌드위치 쿠킹클래스</td></tr><tr><td>4</td><td>2023. 11.1 1 코펜 하겐</td><td>주 덴 마 크(대) 대)</td><td>80 명</td><td>김장 문화체험 행사</td><td>·김치 쿠킹클래스</td></tr><tr><td>5</td><td>2024 .9.14 코펜</td><td>주 덴 마</td><td>70 명</td><td>2024 한국주간행사 한식</td><td>·비빔밥, 잡채 쿠킹클래스</td></tr></table>	연 번	기간 ·장 소	주 최 인 원	행사명	프로그램	1	2021 .6.18 .-20 비대 면	주 덴 마 크(비 대) 대) 면)	20, 00 0 명 (비 대 대 면)	2021 코펜하겐 김치 페스티벌	·김치 쿠킹클래스	2	2022 .9.18 코펜 하겐	주 덴 마 크(대) 대)	30 명	2022 한국주간행사 한식 쿠킹클래스	·김치 쿠킹클래스	3	2023. 9.16 코펜 하겐	주 덴 마 크(대) 대)	80 명	2023 한국주간행사 한식 쿠킹클래스	·김밥, 야채전, 불고기 샌드위치 쿠킹클래스	4	2023. 11.1 1 코펜 하겐	주 덴 마 크(대) 대)	80 명	김장 문화체험 행사	·김치 쿠킹클래스	5	2024 .9.14 코펜	주 덴 마	70 명	2024 한국주간행사 한식	·비빔밥, 잡채 쿠킹클래스
연 번	기간 ·장 소	주 최 인 원	행사명	프로그램																																	
1	2021 .6.18 .-20 비대 면	주 덴 마 크(비 대) 대) 면)	20, 00 0 명 (비 대 대 면)	2021 코펜하겐 김치 페스티벌	·김치 쿠킹클래스																																
2	2022 .9.18 코펜 하겐	주 덴 마 크(대) 대)	30 명	2022 한국주간행사 한식 쿠킹클래스	·김치 쿠킹클래스																																
3	2023. 9.16 코펜 하겐	주 덴 마 크(대) 대)	80 명	2023 한국주간행사 한식 쿠킹클래스	·김밥, 야채전, 불고기 샌드위치 쿠킹클래스																																
4	2023. 11.1 1 코펜 하겐	주 덴 마 크(대) 대)	80 명	김장 문화체험 행사	·김치 쿠킹클래스																																
5	2024 .9.14 코펜	주 덴 마	70 명	2024 한국주간행사 한식	·비빔밥, 잡채 쿠킹클래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table><tr><td></td><td>하겐</td><td>크(대)</td><td></td><td>쿠킹클래스</td><td></td></tr><tr><td>6</td><td>2025.7.12 · 코펜하겐</td><td>주덴마크(대)</td><td>70명</td><td>2025 한국주간행사 한식 쿠킹클래스</td><td>·김치 쿠킹클래스</td></tr><tr><td>7</td><td>2025.9.13 코펜하겐</td><td>주덴마크(대) , 한인회</td><td>70명</td><td>한식 쿠킹클래스</td><td>·떡(경단) 쿠킹클래스</td></tr></table> - K-푸드 행사는 주로 대사관 한국주간행사 시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나, 2021 김치 페스티벌 및 2023 김장 문화체험 행사, 2025 쿠킹클래스의 경우 별도 개최되기도 하였음. - 쿠킹클래스 장소로 주로 관저·청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장소 수용인원 제약으로 참석자가 회당 70~80명 내외임에도 모집 단계에서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가 상당함. - 덴마크 내 K-콘텐츠 수요 증대로 한식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한국주간행사와는						하겐	크(대)		쿠킹클래스		6	2025.7.12 · 코펜하겐	주덴마크(대)	70명	2025 한국주간행사 한식 쿠킹클래스	·김치 쿠킹클래스	7	2025.9.13 코펜하겐	주덴마크(대) , 한인회	70명	한식 쿠킹클래스	·떡(경단) 쿠킹클래스
	하겐	크(대)		쿠킹클래스																				
6	2025.7.12 · 코펜하겐	주덴마크(대)	70명	2025 한국주간행사 한식 쿠킹클래스	·김치 쿠킹클래스																			
7	2025.9.13 코펜하겐	주덴마크(대) , 한인회	70명	한식 쿠킹클래스	·떡(경단) 쿠킹클래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별개의 K-푸드 사업 추진이 시기상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본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편성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난 5년간 한국어확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고려사항 ○ (한국어 채택지원 사업) 주덴마크대사관은 2020-2021년 교육부 한국어 채택지원 사업을 통해 덴마크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수업 채택을 지원하였음. - 2020년에는 코펜하겐 소재 International School of Hellerup에 제2외국어 수업으로 한국어를 채택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동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에 대한 반응이 좋아 2021년까지 동 사업을 지원하였음. - 동 사업의 한국어 확산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국어 교원 수급 어려움과 수강생 수 부족(5명)을 이유로 2022년 이후 동 채택지원 사업은 중단되었음. - 특히 독어·불어와 같은 유럽권 주요 제2외국어에 비해 아직 초·중등교육 내 한국어 수요가 크지 않아 수강생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는바, 장기적 관점에서는 학생층 내 인기를 얻고 있는 K-콘텐츠를 매개로 한국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보급 확산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글학교 지원)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사 및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비영리 주말학교인 한글학교가 코펜하겐과 올란드 지역에 각 1개소 운영 중이며 주덴마크대사관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코펜하겐 한글학교 60명(재외동포 34명 및 외국인 26명), 올란드 한글학교 24명(재외동포 10명 및 외국인 14명) 등록하였음. - 한글학교 본연의 목적에 맞게 덴마크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자녀의 한인 정체성 성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47.6%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음.
주제네바 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	1.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현황 및 이와 관련한 건의 애로사항 자료 제출할 것	○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현황 자료 기재출(2025.10월) - 2025.10월 기준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근무 한국인은 총 24개 기구에 231명(파견직 포함, JPO 19명 별도) -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직원(JPO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포함) 대상 간담회 개최, 정기·수시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원활한 근무 지속 지원 예정 ○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애로사항 자료 기제출(2025.10월) - 2025년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의 예산 상황 악화로 3년차 연장 대상 한국인 JPO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외교부·대표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전원 계약 연장 성과 도출 - 앞으로도 우리 대표부는 주요 국제기구에 고위직 포함 한국인 진출이 확대되고 고용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
	2. 다자외교에서 국익증진 방안 마련하여 자료 제출할 것	○ 다자외교 국익 증진 방안 자료 기제출(2025.10월) - 글로벌 의제 논의에 대한 기여 및 국익 관련 현안에서 발언 강화 - 한반도 평화 의제 적극 추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우호적인 다자외교 환경 조성 -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 지속 및 국제기구 개혁 논의 동참 -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기구의 책임성·투명성, 개발·인도지원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지속 요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2025.9월 제출된 OHCHR의 북한인권 포괄적 보고서 제출할 것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적극 지원 / 공공외교 행사를 통한 국제기구 내 친한 네트워크 공고화 ○ 국정감사 수감 이후 국회측에 해당 보고서(A/HRC/60/58) 원문을 제출하였음.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1.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강화 방안, 건의·애로사항을 파악해 보고할 것	○ 우리 공관은 본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오스트리아 소재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 국민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 고위직 면담과 함께, ▲주요 다자회의 계기 우리 국민 채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국제기구 한국인 직원 면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해오고 있음. ○ 향후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 기여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 국민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체계적인 커리어 설계 지원 등 종합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분야별·기구별 공석 관련 정보를 충실히 파악하여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함. - 우리 정부 지원 JPO들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우리 다자외교의 지평을 키우고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	국제기구에서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음. ○ 규범 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다자무대에서의 기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을 전략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 공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총회 의장 수임 등 국제기구 내 중심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군축·비확산, 원자력, 마약·범죄, 개발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 2021-22년 IAEA 이사회 의장 수임 △ 제68차 IAEA 총회(2024년) 의장 수임 △ 2021-23년·2023-25년 IAEA 이사국 수임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2024-2028년 이사국 수임 △ 마약위원회(CND) 2022-25년 위원국 수임 △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2025-27년 위원국 수임 △ 2026년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 수임 등 ○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제공하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한반도 안보·안정과 경제 발전의 토대인 만큼, 이를 지지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를 계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 공관은 ▲한-EU 및 한미일 대사급 협의 정례화, ▲MIKTA, JUSCKANNZ 등 소다자 협의체 활성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소통 채널 다각화 등을 포함하여,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주요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IAEA 총회·이사회, 유엔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마약위원회(CND) 등 다양한 회의 계기 공동발언 및 부대행사 등 유사입장국간 공조 및 연대도 강화 중임. - 아울러, UNIDO 주요 공여국으로서 우리 산업화·경제발전 경험 공유 및 IT·디지털 등 전문성에 기반한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및 연대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핵·북한 문제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 정책 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우리 공관은 IAEA 이사회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총회에서 북핵 문제 의제 토의를 주도하고, 매년 총회에서 북핵 결의가 채택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IAEA 사무국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음. ○ 한편, AI·우주 등 신기술 분야와 미래 국제평화·안보 담론에 초점을 맞춰, 다자무대에서의 미래지향적·혁신적 리더십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 공관은 ▲AI 활용, 소형모듈형원자로(SMR), 해상원자로 개발 등 IAEA 내 원자력 혁신 관련 논의 ▲유엔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내 우주 거버넌스 논의 ▲바세나르체제 내 군사적 전용 가능 기술·물품 확산 방지 논의 등 주요 의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IAEA 원자력장관회의는 매 4-5년 주기로 열리는 원자력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로서 원자력 개발·활용 관련 최신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인 만큼, 우리가 원자력 혁신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IAEA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성공적 회의 개최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 IAEA 원자력장관회의 개요 - 회의명: International Ministerial Conference on Nuclear Power - 일시 및 장소: 2026.10.27.(화)-29.(목), 인천 - 주요 의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및 원자력의 개발·활용 등 관련 최신 주요 현안 논의 ○ 또한, 우리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최근 국제기구 예산 감소 추세 하에서 다자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주재국 내 교과서의 한국 관련 기술 현황을 정리해 제출할 것	○ 우리 공관은 오스트리아 정부 기관, 교과서·지도를 발간하는 출판사 등을 수시로 접촉, 한국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음. ○ 이를 통해 2020년 이래 개정된 교과서 5종에서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지도 △한국의 자연·경제·사회 관련 단순 오류 등을 시정하였음. ○ 한편, 2024년에는 외교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협업하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오스트리아 교육부 및 교과서 출판 관계자 4인 대상 한국 초청 연수를 진행, 한국의 발전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우리 공관은 앞으로도 오스트리아 교육 관계자 및 출판사 등을 지속 접촉하여, 교과서 신규 출간·개정 시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해나가고, 경제·사회 발전상 및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가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관련 내용이 충실히 기술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임.
	4. 오스트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공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 적극 공유할 것	○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20여개 지상사가 진출해있는바, 정례 지상사협의회, 개별 기업 수시 면담 등을 통해 ▲주재국 및 EU 정책 정보 공유, ▲의견 수렴 등 적시성 있는 쌍방향 소통 및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음. ○ 우리 지상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뿐 아니라 지상사들의 대외행사시, 행사 내실화를 위한 지원(주재국 정부 참석 요청, 전통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민관간 시너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경제부, 외교부 등 주재국 정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를 면담하여 우리 기업의 의견 및 애로사항 전달/해소, 양국 기업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 활동에서 더 나아가, ▲연례 한-오스트리아 경제협력 포럼 개최, ▲공관장의 주재국 기업인 면담시 지상사 대표 동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오스트리아 진출 확대도 도모 중임. ※ 한-오스트리아 경제협력 포럼은 2023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생명과학 주제로 개최하였고, 2026년에는 방산 주제로 개최 예정 ○ 26.3월 우원식 국회의장 방오 계기 가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과 국회간 직접적인 소통 기회도 마련하였음.
주모로코 대사관	1. K-ETA 불허에 따른 비자 신청 급증 등 영사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인력 보강 등 대응방안을 검토·추진할 것	○ 우리 대사관은 본부의 2027년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 수요 조사시 영사 담당 행정인력 증원을 요청(26.1.14.)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담당과와 소통 중
주튀니지 대사관	1. 공식 물가지표와 시장 체감물가 간 괴리 등 현지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직원 처우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 주튀니지대사관은 행정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본부와 소통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력 증원도 건의했음. ○ 열악한 튀니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안정적 인력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2026년부터 튀니지가 특수지로 지정되었고, 튀니지 행정직원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주튀르키예 대사관	1. 공관 인력 감축 경위 및 현지 업무수요(치안·영사 등)를 고려한 인력 확충/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현재 인력구성(공관장 포함 외교직원 5명)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업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 최근 대통령 튀르키예 국민방문(25.11월), 국회의장 튀르키예 공식 방문(25.12월), 외교장관 튀르키예 방문(26.1월) 등 고위급 외교행사 연쇄 개최 - 금년 △에르도안 대통령 방한 추진 △나토정상회의(7월 튀르키예) △ 기후변화당사국회의(11월 튀르키예) 등 정상외교 수요 대폭 증가 ○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주요 분쟁의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역내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의 외교 인프라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24.7월부로 무관부의 인력조차 2인에서 1인으로 감축되면서 인력난 가중 ○ 금년초 2027년 소요정원 조사시 정무담당관 1인 증원을 요청하는 등 인력 확충 노력 지속 - 비생산적인 업무 줄이기 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적정한 인력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1. 주택임차료 상한 및 공무원여비규정상 금지 조정과 관련하여 본부 협의 및 점검을 지속할 것	○ 현지 물가 및 임차료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임차료 선지원 및 상한 조정, 국외여비 금지 조정을 본부에 건의한바 있음 - 현지 실정에 따른 주택임차료 및 숙박비 등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인바, 필요시 본부에 추가 건의 예정임
주레바논 대사관	1. 시리아 관련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의 예외 기준 표준화 작업을 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 방향을 의원실과 공유할 것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여행금지국에 대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제도를 운영중이며, 인도적 구호 활동 등에 대해서도 예외 사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외 인도적 구호 활동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중임. ※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 일반에 대한 검토

Ⅲ. 산하 기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국제 교류재단	1.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역점사업인 해외 정책연구 지원 사업 결과물 및 연구보고서를 전문가 및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 및 정부 정책연구포털에 공개할 것	○ 재단은 '22-'23년 미공개 결과물 77건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26.2.24.)하였으며, '24-'25년 결과물도 '26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 ○ 아울러,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개선

//끝//